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인 쇄 2008년 12월

발 행 2008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02-901-2524 팩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센터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 김규륜 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핵심국정과제 연구시리즈 ; 08-03)

ISBN 978-89-8479-489-4 93340 : ₩7000

남북협력[南北協力]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8003961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I. 신남북협력 추진전략의 제기	7
II. 신남북협력 추진환경과 역량	13
1. 국제	14
2. 북한	30
3. 내부역량	39
III. 신남북협력 전략목표	45
1. 전략목표	46
2. 추진기조	47
3. 추진원칙	48
IV.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51
1. 복합적 평화구조 구축전략	52
2. 북한의 현대화 촉진 지원전략	61
3. 통합적 교류협력 전략	75

CONTENTS

V. 신남북협력 추진 관련 전략과제	91
• 1. 한반도형 CTR 프로그램 추진	92
• 2.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	94
• 3. 지역경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95
• 4. 북한개발지원그룹(가칭) 설립	97
• 5. 민족재난 사태에 대한 공동대비	101
• 6. 역사·영토문제 공동대처	107
부록 한반도형 협력적 위협감축 추진방안	111



- 협력적 평화증진(Cooperative Peace Enhancement) 전략
 - 남북한간 새로운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 “협력적 평화증진(Cooperative Peace Enhancement)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신남북협력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음.
- 협력적 평화증진을 신남북협력의 요체로 설정한 것은 동 전략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과 연계성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 협력적 평화증진에서 추구하는 협력의 방향은 협력 주체간 협력과 협력 분야간 협력을 포괄함.
 - 주체간 협력이란 남북협력, 국제협력,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간의 연계를 모두 의미함.
 - 분야간 협력은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각 분야간 연계를 의미함.
 - 협력적 평화증진 전략에서 추구하는 협력은 주체간 협력과 분야간 협력을 긴밀히 연계하는 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함.
- 협력적 평화증진은 남한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6자회담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임.
 - 협력적 평화증진전략은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큰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의 기본개념을 남북협력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함.
- 협력적 평화증진은 남북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대남정책에 대해서 Tit-for-Tat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협력을 통한 평화의 증진 개념에 의한 남북관계 정착을 지향함.
 - 냉전이 해소된 지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논의구조를 갈등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전환하여,
 -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및 다원화된 사회 논의구조라는 국가적 역량을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한 보다 선진적인 개념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

- 현재 남북관계는 소강 및 경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형태의 대북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에 의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협력적 평화증진은 과거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상생·공영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
 -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킨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
 -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경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남북간 양자게임으로 인식한 경향이 컸으며,
 -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으로 인해 ‘퍼주기 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
 -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선거 공약의 특성상 정책의 목표만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책으로서의 안정감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채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음. 특히, 북한의 강한 반발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및 남한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비핵·개방·3000 구상’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상생·공영 정책’은 정책적 합일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과거 정부와 차별된 대북정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협력적 평화증진 전략은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현방안을 선도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한편, ‘상생·공영 정책’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진적 개념 및 사고가 반영된 대북정책을 제시함.
 - 정부부처, 대북경험 사업자, 민간단체를 포함한 남북관계를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실무자 및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함.
- 새로운 남북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대북정책

의 추진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신남북협력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한 이후 세부적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음.

- 3대 목표 :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

- 3대 전략 :

- 복합적 평화구조 구축 전략 (비핵·평화)
- 북한의 현대화 촉진지원 전략 (개방·개혁)
- 통합적 교류협력 전략 (통합·통일)

○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주관하여 외부의 공동연구자들과 수차례의 집중워크숍 및 정책간담회를 통한 긴밀한 연구협조체제 하에 수행되었으며, 현 정부 대북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매우 필요하였음.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담고자 하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연구의 내용이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향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 신남북협력의 목표와 전략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환경적 요소인 국제환경과 북한을 분석하고, 우리의 내부역량을 적시(指示)해야 함.

1. 국제

가. 경제위기 이후 국제환경 변화의 특징

(1) 다극화 추세의 가시화

-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반테러·반확산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중심으로 ‘강대국간 협조 체제(concert of powers)’를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왔음.
- 반면, 경제적으로 신흥국들인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확대되는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對미국 견제의 움직임도 동시에 보임에 따라 미국의 지도력으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원심력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 위기가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참석한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에 관한 정상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 : 이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에 이어 미국 부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주요 8개국(G-8)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등 11개 여타 주요 경제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EU) 의장국이 참석하였음.
- G-20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금융 위기임을 인식하고, 금융 위기가 점차 실물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어 전세계적인 경제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최되었음.



- 현재의 위기상황을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동시에 나아가 위기발생 배경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현 국제 화폐·금융 체제인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 이하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이번 G-20 정상회의는 G-20 재무장관회의체의 틀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히 개최될 수 있었음.
 - 1999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0개 주요 경제국들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소집하였고, 이후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금융 공조의 틀로 활용해 왔음.
-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긍정적 시각은 최근 금융 위기로 대두된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의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고,
 - 부정적 시각으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 예를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한 동시 재정지출 확대안 등의 개선이 미흡하였다는 점임.
-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가 단시간 내에 개최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경제국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과 2009년 4월 말 이전 제2차 정상회의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회의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단 ‘불완전한 성공(incomplete success)’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G-20 재무장관회의의 2010년 의장국인 한국이 2008년 의장국이었던 브라질과 2009년도 의장국인 영국과 함께 ‘주요 3국(management troika)’을 구성하고 차기 G-20 정상회의의 준비 책임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체제 재편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역할을 맡게 되었음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세계적 확산 상황을 배경으로 개최된 이번 G-20 정상회의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와 함께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를 안고 있었음.
-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EU 국가들과 다수의 신흥국들은 국제금융제도의 근본적 개혁, 즉 새로운 브레튼우즈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

고 있으나, 미국은 현 체제의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음.

- 이러한 대조적인 입장 속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체제 개혁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단 미국측의 개선안에 합의하는 형식으로 일단락되었음.
 - 그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만료가 임박해 있고,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정치적 제약성도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향후 G-20 정상회의가 2009년 4월 말 2차 회의 이후에도 연속성을 지니고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다루는 책임 있는 회의로 계속 가능할 경우, EU를 중심으로 한 ‘新브레튼우즈체제’ 구축론이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임.
- 향후 전개될 ‘新브레튼우즈체제’ 구축 논의는 쉽게 결론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브레튼우즈체제 출범에 최소 2-3년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함께 각국의 입장 차이가 현저한 데서 예상되는 것임.
 - 미국은 비록 현 금융 위기의 발원지이나 신자유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대내적으로는 금융 부문의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금융체제의 보완적 개선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
 - EU는 新브레튼우즈체제 구축이 지체되어 옴으로써 현 위기가 발생되었다는 시각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체제의 대폭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영국의 입장 강도가 다르듯 EU 내부에서도 의견의 상이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금융 위기를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지를 지니게 된 일본과 중국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EU와 같은 선도적 주장은 회피하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과 중국이 공히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일본의 경우는 자국 외환 보유액의 10% 정도인 약 1천 억 달러를 IMF에 별도 출자하여 신흥국 대상의 긴급지원 용자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UN 상임이사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도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지속에 긴요한 전략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진출의 적극화와 위



안화의 국제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 브라질, 인도와 같이 세계 경제의 중요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는 여타 신흥국들은 일본, 중국 등이 취하고 있는 '신중한 자세'를 감안하면서, 새로운 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개진하기보다는 이번 금융 위기를 세계 경제문제 논의에 있어서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음.

○ 한편, 1970년대 개도국에 의해 제기되었던 포괄적인 '新국제경제 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주장이 선·개도국 대립이라는 단순 구도에서 선진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던 경우와 비교하면, 현재의 논의 구도는 △ 미국, △ EU·일본 등 여타 선진권, △ BRICs 등 신흥국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 금융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이 더욱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이번 G-20 정상회의가 미국을 진원지로 한 금융 위기의 결과로 소집되었고, 또한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은 국제경제체제, 현 브레튼우즈체제가 태동될 때의 힘의 분포와 달라짐에 따라 더 이상 원활히 작동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음.

- 미국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당시 대립하고 있던 구소련 중심의 사회주의권에 대해 다수의 양자 동맹과 NATO와 같은 지역 단위의 집단방위 체제를 주도하는 한편,
- 경제·통상적 측면에서는 브레튼우즈체제 내의 기축통화국 지위의 토대 위에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여 왔음.

○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단극적 위상이 유지되었지만, 경제·통상적 측면에서는 EU, 일본 및 여타 신흥개도국들(NICs)의 등장으로 힘의 분포가 실질적으로 다극화됨으로써 '단일·다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세계화가 진전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80년대 이후 BRICs 국가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이 세계 경제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확대되었음.

- 이러한 단일·다극화의 위계질서는 두 가지의 불연속성을 내포하게 됨. 하나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힘과 경제·통상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단층(斷層)이고, 또 다른 불연속성은 경제·통상 내에서 존재하게 된 괴리(乖離)임.
- 특히, 경제·통상적 측면의 경우, 무역에서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매우 위축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왔으나, 금융면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조의 세계적 확산, 선진 금융 기법의 개발 및 IT 산업의 발달 등으로 무역면에서의 위상 약화를 만회하고, 오히려 신경계(new economy)의 주체로 국제 경제의 주요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임.
- 이러한 경제·통상 내부에 존재하는 무역과 금융 측면에서의 힘의 불일치가 외견상 큰 문제로 부각되지 못한 이유는
 -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의 대미 무역 흑자가 제반 금융 상품을 매개로 미국으로 환류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 기존 국제금융체제의 미비성이 이러한 불일치를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케 하여 왔기 때문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무역면에서는 다수의 무역 라운드(다자간 무역 협상)를 통해 비관세 장벽, 서비스, 농업 및 투자 등 새로운 현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경주되어 왔으나, 금융면에서는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적 노력이 결핍되어 왔던 것임.
- 그러나 이번 미국발 금융 위기는 탈규제와 규제 완화 등에서 이루어진 금융 자본주의 발전이 무한하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미국 경제력의 무역과 금융 간의 괴리도 재조명 받게 되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개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의 주도력이 경제적으로 손상되었음을 현실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 경제력의 현실적 위상 하락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주목되었던 미국의 정치·군사적 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려 미국의 힘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의 계기가 되고 있음.
- 또한 G-20 정상회의가 기존의 주요 국가들의 모임인 G-8의 범주를 확대하여 신흥국들을 대거 참여시켜 개최된 것은 세계 경제에서 점유하는 신흥국들의



경제적 위상과 함께 이들 국가들의 참여가 국제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 더욱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결론적으로, 주요국간 관계는 정책 현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발현, 교차되어 점차 다극화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각국은 전략 변환을 시도함으로써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임.

(2) 국제경제 질서 재편의 가속화

- 중국, 인도, 러시아와 브라질 등 소위 'BRICs'로 일컬어지는 신흥 경제국들의 부상은 세계 경제상의 생산, 소비 및 투자 패턴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자원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킴에 따라 이들 물자들의 전략적 중요성도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금융 위기는 금융 세계화의 결과로 인해 급속도로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동성의 경색에 이어 실물 경제의 급속한 위축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금융·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 일본 및 EU 등 주요 경제국들은 세계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체제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제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비록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신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한편, 이번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현 체제 고수 의지가 재확인됨으로써, '체제의 개혁(reform of system)'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개혁(reform within system)'으로 일단 합의 되었으나,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정상회의가 신속히 소집되었고, 또 추후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은 금융 위기의 배경에는 비단 금융 규제·감독의 미비점들이 노정되었다는

동인(動因)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1944년 합의된 브레튼우즈체제는 IMF와 GATT를 축으로 3개의 원칙, ①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의 자유화, ② 자본 이동 제약에 대한 허용, ③ 고정환율제도의 운용에 입각하고 있었음.
- 이러한 초기의 원칙은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3개의 조건이 동시에 성립되지 못한다는 소위 ‘3자택일의 궁지(trilemma)’ 중 국제 자본 이동(mobility)을 제약하는 대신 고정환율제를 통해 국제 수지의 안정성(stability)을 확보하여 자유 무역을 활성화하면서,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의 자율성(autonomy)을 확보한다는 결합 조건을 의미하고 있었음.
- 그러나 1971년 브레튼우즈체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금-달러 본위 고정환율제도가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금 태환을 중지하고 달러 본위제로만 운영하는 ‘스미소니안(Smithsonian) 체제’(1971-76년)로 잠정 변경되고, 이후 1976년 킹스톤(Kingston) 합의를 통해 변동환율제로 최종 변화됨에 따라 결합 조건이 자본 이동을 제약하는 것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재구성되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화폐주조권(seigniorage)을 활용한 과도한 대외 지출,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확대된 ‘오일 달러’ 및 급속한 통신 수단의 발달로 적극적으로 전개된 금융혁명(financial revolution) 등의 제반 요인들이 더 이상 고정환율제의 고수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 이동의 제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아직도 브레튼우즈체제로 불리고 있는 국제금융체제는 1970년대 이후 이미 ‘현실적으로는 존재·작동되지 않는 제도(non-system)’ 또는 ‘후기 브레튼우즈체제(Post-Bretton Woods System)’ 등으로 일컬어져 왔음.
- 이러한 일종의 무(無)제도 하에서 1980년을 전후로 강화되어 온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금융 자본에 대한 각국의 대내외적 규제 완화와 탈규제 현상은 국제적 감시·감독과 협조 체제가 작용하지 않는 가운데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제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급속히 증권화·유동화 되는 각종 신규 금융 상품들의 위험성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결국 현재 목도(目睹)하고 있는 전세계적 차원의 금융·무역을 망라하



- 는 총체적 위기 상황을 야기하게 된 것임.
- 이렇듯 현 국제경제 체제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 위기의 구조적 요인들을 찾는 시각이 폭넓게 공유되면서, 국제 금융 위기의 재발 방지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체제의 개혁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는 그간 지체되어 왔던 국제 금융, 나아가 국제경제 체제를 실제로 개혁하는 중요한 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개최는 한편으로는 제2차 대전 종결 이래 유지되어 온 미국의 경제력, 더 나아가 미국의 힘에 대한 현실적 재평가의 기회가 된 동시에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정이 되었음.
 - 이러한 권력이동(power shift)의 양상은 미국을 포함한 G-8이 세계 총생산의 약 60%와 인구의 약 13% 만을 점유하는 데 비해, G-20 국가들이 세계 총생산의 약 90%, 무역의 약 80% 및 인구의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 수치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미국 경제력에 대한 재평가 결과, 국제금융체제 논의에서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 유로(Euro)화가 탄생되어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의 중요성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아가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안화도 태환성을 확보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국제 통화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시효 만료(outdated)' 된 역할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달러-유로-엔' 화를 공동통화(common currencies)로 하는 새로운 국제 통화구조 창출문제를 거론하고는 있으나, 현재 전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여전히 60%를 상회하는 한편, 유로화가 약 26%, 엔화가 약 3%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대체할 통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환율제도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으로 기타 통화와의 연계 방식의 고안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렇게 볼 때, 비록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절하가 불가피하더라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변경은 대안의 부재로 상당 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가속화될 경우 1970년대 시도되었던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류의 과도기 통화의 사용 방안이 검토될 수는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는 비단 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주요국들로 하여금 경제력의 상대적 분포 변화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임.

(3) 다자협력의 유용성 증대

-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은 테러리즘의 확산을 비롯하여 환경, 난민, 질병 등 다수의 초국가적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음.
- 특히,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세계적 확산 사례에서 노정되었듯이 경제의 세계화는 신흥 경제국들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거나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여력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그 결과 다수 개도국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세와 관련,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의 하나가 다자주의에 대한 수용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임.
 -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치에서 볼 때, 다자주의는 대외정책 상의 행동반경을 제약할 수도 있어 유용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왔으나,
 - 9.11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제로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의 재평가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방향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제반 요소들이 그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첫째, 경제·통상 측면에서의 힘의 분포가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과 에너지 자원에 힘입은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수의 신흥국들이 출현하게 됨에



- 따라 더 이상 미국 주도의 질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력 분포의 변화는 점차 정치·안보 측면에서의 위상 변화도 초래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국제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도 힘의 분포 변화로 점차 일방적 결정보다는 협상에 의할 것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임.
- 둘째,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위협들, 즉 테러·환경·난민·마약 등의 의제들은 탈(脫)국경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한 국가의 주도로 강구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다자적 협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임.
 - 셋째,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획기적 기술 발전은 다극화 추세로 부상한 다수의 주요 행위자들이 다기(多技)한 국제 현안들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게 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국제 협상이 가능해졌으며, 그 틀로써 다자 협의체 조직들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임.
 - 넷째, 이번 금융 위기의 전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관찰되고 있듯이, 세계화의 심화로 특정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국경 내에 제한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역 또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들도 상당 수준의 경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 질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급적 분담하려는 경제적 계산이 작용하게 됨. 이러한 경제적 동기는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다수의 관련 국가들이 공동 권한과 책임 하에 영위하게 되는 다자 접근을 선호하게 함.
 - 끝으로, 다자적 접근은 기회를 최대화하여 위협을 분산하려는 외교 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임. 이러한 예는 경쟁과 협력의 양 측면을 지니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틀이 위협을 분산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세계화 진전에 따르는 제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의 하나로 G-7은 1975년 당시 브레튼우즈체제가 미국의 금태환 정지 조치로 실제로 무기력하게 된 가운데, 석유 가격이 앙등하는 상황 하에서 주요국 간의 공조(coordination)로써 국제금융체제의 취약성, 즉 무체제(non-system) 상태를 극복하자는 데서 출발하였음.
 - 이후 G-7(후에 G-8)은 점차 정치·안보 면에서의 국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국

제질서 관리(global governance) 기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변화된 힘의 분포를 반영하여 확대·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1998년 기존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에 러시아를 추가하여 결성된 G-8은 2000년대에 들어와 상기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국가들로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를 접촉확대국가(Outreach 5 : O-5)로 선정함으로써, 향후 G-8을 더욱 확대할 경우 이들 5개국을 추가하여 G-8이 G-13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여 왔음.
- 한편 2008년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회의에는 이들 13개국 외에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추가되어 주요 경제국 회의(Major Economies Meeting : MEM)의 형식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한바 있는데, 이 MEM 형식, 즉 'G-13+a'안이 향후 G-8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또 다른 대안으로서 고려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G-13, 'G-13+a' 외에 G-8 확대안으로 가능한 것은 1999년 시작된 G-20 재무장관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시키자는 안인데, G-20의 당시 의장이었던 폴 마틴(Paul Martin)이 2004년 캐나다 수상에 취임하면서 G-8 확대 대안의 하나로 'L-20(Leaders 20)'안을 주창한바 있음.
- 즉, 국제 사회는 냉전 이후 시대 고조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금융 불안 확산,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앙등 및 기후 온난화의 진전 등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여 UN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1975년 이래 실질적으로 국제질서를 관리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G-8 정상회의를 확대·개편함으로써, 국제질서 관리를 위한 기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가 G-8의 테두리 안에서 소집되었던 G-20 재무장관회의를 기반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은 이번 전세계적 차원의 금융 위기가 향후 G-8 확대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그 논의 과정에서 L-20(G-20 정상회의)안이 유력한 또 다른 대안으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이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정상회의가 G-20 재무장관회의를 기초로 개최된 것은 향후 G-8의 확대·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2000년을 전후로 냉전 이후(post-Cold War)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제반



- 국제 현안들, 즉 에너지·식량문제, 지구 온난화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G-8의 확대 가능성이 검토되어 왔는데, O-5를 추가하여 G-13으로 확대자는 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어 왔음.
- 현재 2007년 독일 하일리겐담(Heiligendamm)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하일리겐담 프로세스’가 O-5의 역할을 검토하고 2009년 이탈리아 G-8 정상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 여전히 G-13안이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G-20 정상회의가 그간 세계경제문제를 조정해 왔던 G-8의 한계를 재확인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G-8 확대·개편 논의는 더욱 추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르면 ‘하일리겐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2009년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현 ‘교토 의정서’ 만료 시한인 2012년 사이, 즉 현 G-8 개최 순번(sequence)이 끝나는 2010년을 전후로 확대 문제가 공식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금까지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던 G-13안보다는 G-20안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한편, G-8의 확대안 자체가 G-8 내부의 이견, O-5 내의 상이성 및 G-8과 O-5 간의 대립적 시각 존재 등으로 논의가 복잡화되고 있어, G-8 확대론의 공식 의제화가 G-8의 차차기 순번이 시작되는 2018년까지로 지체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판단됨.
 - 이 경우, 기존의 G-8과 이번 금융 위기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 G-20은 일정 기간 병행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즉 G-7 재무장관회의는 G-8 정상회의를, G-20 재무장관회의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형태가 구축됨으로써, 국제경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체계가 이원화되는 데서 초래될 비효율과 혼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G-20 재무장관회의와 G-20 정상회의 간의 공식적인 관계 정립 문제 자체도 2009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의 개최지 선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아직 가변성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제반 영향들을 세계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질서 관리체제(global governance)’의 구축이 바람직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단위의 협력 기제들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더욱 적실성을 띠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경제 및 안보 등 제 분야에서 지역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적극 활용해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됨.

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 2008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취임 후 수 개월의 정책검토 기간이 지나야 좀 더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과 부시 대통령 정권 2기를 잇는 선상에서 6자회담에 덧붙여 직접 대화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강인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두 가지의 전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상외의 속도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시 행정부 말기의 상황에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진전만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 현재로서는 후자, 즉 대폭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쪽이 다수의 의견이나, 전자의 개연성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제하기는 어려움.
 - 첫째, 경제위기 극복,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상황 및 이란 핵문제 대처 등 ‘중요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들이 존재하므로 북핵문제는 현상유지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이와 같은 의제들을 단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2년 후의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역으로 상대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핵문제를 ‘용이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임.
 - 둘째, 최근 건강상태 이상을 경험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4-5년 이내에 정권 안정과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유리한 대내외적 조건을 갖추어줘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의 대북 직접대화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케 됨으로써, 일정 수준의 관계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임.
 - 셋째,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에는 힐러리 국무장관은 물론 과



거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접촉 경험자들이 다수 포진될 예상이며, 의회에는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TR)’의 제창자인 루가 의원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상원의원 시절 CTR과 관련된 다수의 ‘오바마-루가’ 법안을 추진하였던 경험 등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핵문제의 동시해결 방향에서 CTR의 대(對)한반도 적용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임.

-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소위 한반도 삼각관계(Korean Triangle)의 축들, 즉 남북, 한·미 및 북·미관계를 들 수 있음.
- 역대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북·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
 - 현 이명박 정부 또한 같은 논리적 토대 위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 있는 남북관계의 유지가 북·미관계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오히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사이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미 있는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미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킴으로써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통해 북·미 접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제반 노력 또한 그 실효성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임.
- 결국,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미국·북한간 삼각관계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조절 가능한 축은 한·미관계 축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도록 한·미관계 강화를, 한·미동맹의 21세기 전략 동맹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대외정책의 선택이 될 것임.

다. 국제 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대외정책 방향

- 점차 다극화 경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쟁과 협력의 교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요국들은 전략 변환을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남한도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이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남북한 분단 상황의 지속이라는 특수성으로 대외정책의 초점을 한반도문제에만 편중해야 하는 기속성(羈束性)을 안고 있음도 사실임.
- 또한 국제 경제 질서가 동요되고 재편 노력이 가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 요소의 정치적 중요성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질서 재편기에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분단 특성 중의 하나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군사안보의 확립이 우선되고 있어, 경제안보적 관점도 중시하는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제한되고 있음.
- 한편,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는 지역 다자협력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다자주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역협력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한도 한반도의 지정·지경학적 위치로 지역 다자협력 움직임에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최대화해 나가는 가운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안고 있으나,
 - 분단과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의 확고한 기초로 작용하고 있어 한·미 양자관계에 대한 고려가 현실적으로 선행되어, 다자 관계의 개발에 일정 수준의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라. 대외정책의 변환과 신남북협력

- 지난 60년간 지속되어온 한반도를 둘러싼 ‘현상유지적’ 환경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주변국의 전략 변환이라는 외적 요인과 북한내 제반 변화의 불가피성이라는 내적 요인 등으로 점차 ‘현상변경적’ 환경으로 전환되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분단의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동시에 열리게 될 것임.
 - 이를 감안할 때,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전개되어야 할 것임.
 - 이는 대외정책 기조를 기존의 분단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분단상황 관리정책’으로부터 통일 과정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통일과정 관리정책’으로 변환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하게 됨.
-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환에는
 -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화를 포함하고,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포괄하는 21세기 국가 대전략을 구상하며, 그 틀 속에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외교 대상의 확장(extension)과 함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안보문제와 함께 경제안보문제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외교 영역의 확대(enlargement)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독일 통일의 사례가 시사하듯, 평화통일 과정을 순조로이 진척시켜 나가는 데 요구되는 복합적 다자협력 구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자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외교 능력의 확충(expansion)도 중요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국제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이 설정될 경우, 그 틀 속에서 향후 남북협력의 방향성이 도출되고, 이에 맞추어 대북정책도 입안·수립되어야 할 것임.
 - 즉, 대외정책의 기존 문제의식을 ‘분단상황 관리’에서 ‘통일과정 관리’로 변

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주변 유관국의 전략적 관여 의지를 외교 대상의 확장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통일 과정의 관리에 유관국의 협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 또한, 점증되는 국제정치상의 경제 요소의 중요성 증대를 감안,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과 북한의 경제 회생이 이에 연계되어 추구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임.
- 한편, 다자 외교 능력을 확충하여 유럽의 OSCE, EU, NATO 및 '2+4' 프로세스 등 독일 통일 과정에서 유용하였던 다자협력 기제들을 이 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다자협력의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실질적 진척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제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이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이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대외정책의 틀과 연계되어 설정될 경우,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간의 정합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비핵·평화', '개방·개혁' 및 '통합·통일'이라는 '신남북협력' 목표의 달성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11-1〉 신남북협력을 위한 대외정책 방향

국제환경의 변화	대외정책의 방향	신남북협력을 위한 대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과 협력의 교차 • 국제경제질서의 동요 •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 • 군사안보 중심의 대외정책 전환 • 다자주의 지역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과정 관리정책으로의 변환 • 외교의 확장(3E of D) • 6자회담의 실질적 진척

2. 북한

○ 신남북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 환경에 있어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면서, 북한의 체제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여기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에 있어 주요한 변화 요인들을 현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검토해보고자 함.

가. 내부 환경

(1) 정치적 측면 : 정권의 안정성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들이 증가하면서 향후 한 동안 북한 정치의 핵심변수는 post-김정일과 관련된 쟁점이 될 것임.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고자 하겠지만, 권력승계와 관련된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음.
-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는 3대세습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누구인가? 그리고 집단지도체제의 등장 가능성 및 군부의 주도권 행사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파벌들 간의 세력관계,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세력의 성격, 혼란기 민중의 움직임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권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후계구도를 둘러싼 내부 권력 투쟁 발생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장기간의 후계자 수업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에 떠오르는 강력한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후계구도가 집단지도체제이든 3대세습이든 개혁파가 확실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면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노선을 택하게 될 것임.
 - 현재와 같은 노선으로는 북한 체제의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전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의 중심 세력이

개혁과가 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임.

- 권력승계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임. 군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정치세력과 개혁파 간의 노선 갈등이 발생하여,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한동안 지속된다면 북한 정치는 한동안 혼란 상태를 겪게 될 것임.
 - 이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 부문의 개혁에 손을 댄다면, 북한 체제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소련의 경우 개혁에 대한 보수파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개혁에 착수하는 순간, 변화는 고르바초프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음.
 -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북한 내부의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거나 한국행을 인정해주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에 큰 충격이 될 것임. 동독의 경우에 인근 국가인 헝가리의 국경개방이 대량 탈주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량 탈북사태 발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함.
- 권력승계 과정에서 민중의 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 가능성이 있음. 정책결정집단의 비교적 균일한 성격, 체제 저항세력의 낮은 조직화, 반체제 세력의 구심 부재 등 북한 체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권력승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궁정 쿠데타’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루마니아의 경우 차우세스쿠의 몰락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중들의 열기가 높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권위주의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음. 북한의 경우에도 반체제 세력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결정집단 내에서의 권력교체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을 고려하면, 어떤 국가도 아래로부터의 변화 압력만으로 체제전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화는 위에서부터 이루어졌음.
- 북한 체제의 경우에도 그 특성상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압력으로 인해 붕괴하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체제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향후 한동안 북한 정치는 권력승계를 둘러싸고 내부적인 체제 안정성 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권력승계를 둘러싼 내부적 문제가 본격화되는 경우 대외



관계는 기존의 관성을 유지하거나 외부 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음.

(2) 경제 : 경제난 극복

-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 스스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음. 1999년 이후 플러스로 돌아선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200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인해 각지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분조관리제 개선 등 나름의 개혁을 시도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생적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특히 개방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후계구도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내부정치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임.
 - 오히려 정치적 혼란기에는 외부의 위협요인을 과장함으로써 내부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문제나 대남관계에 있어 비타협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문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핵문제 해결을 통한 대미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임.
 - 비교적 확실한 것은 북한이 대미·대남관계의 상관성을 이용하여 양자관계를 이간시키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관여(engagement) 정책을 표방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핵문제를 진전시켜 나아간다면, 남북관계의 경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자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사이에서 남한 정부의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

-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음. 북한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제 금융기구 등 국제기구에 가입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지원에 부가되는 국제적 기준이 요구될 것이고, 결국 북한은 내부 사회의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속도 조절을 시도할 것임.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북한 체제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제한적 개혁·선별적 개방이 가능한 수준에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함.

(3) 사회 : 내부 안정성 유지 여부

- 경제난·식량난의 확대는 국민들의 국가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구입을 위한 이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식량배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을 막을 명분이나 방법이 없음.
 - 이러한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한 정보 유통의 확대와 이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은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비사회주의 조직(그루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내부 검열 강화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게 되면서 국가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북한 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실패가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서구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계층이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산업화가 아닌 경제와 산업의 붕괴 과정에서 새로운 계층이 발생하기 때문임.
 - 즉, 경제의 해체 과정에서 국가 통제 영역 밖에 존재하는 주민들은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사적인 생존의 확보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



에, 국가에 대항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함. 따라서 이들의 조직화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 영역 밖의 생활이 증가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변화나 외부의 충격 등 적절한 계기(trigger)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의 증대를 의미함.

나. 북한의 대외 환경과 예상되는 대응 방향

(1) 핵문제

- 핵문제에 있어 북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모호성의 유지임.
 - 북핵문제와 관련된 쟁점은 북한 핵 능력의 과거, 현재, 미래임.
- 첫째, 과거 핵활동과 관련해서 본다면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는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핵확산에 개입한 적이 없는가?
- 둘째,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몇 기이며, 핵분열성 물질(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재고는 어느 정도인가? 영변 핵시설의 상태(불능화 및 복구정도)는 어떠한가?
- 셋째, 폐기 및 검증의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의 수준임. 북한이 가진 소수의 핵무기를 인정할 것인가? 북한의 미래 핵활동 가능성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억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경수로를 제공할 것인가? 테러지원국 및 경제 제재 조치의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외에도 핵과 연관된 미사일문제, 재래식군비 감축문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 인권문제,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 등 다양한 이슈 영역들이 북핵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북한으로서는 술한 쟁점들 가운데 스스로에게 영향이 적은 것부터 해소해 나가되, 가능한 한 쟁점들을 세분화하여 최대한 남겨놓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선택 폭을 넓게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예컨대 검증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북한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음. 즉, 자신들의 핵활동만을 검증하고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

군을 포함한 남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하자는 것임. 따라서 북한은 검증 단계에 들어가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견지에서 쟁점을 확대시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임.

- 과거 핵능력에 대해서도 확실한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거나, NPT 회원국의 권리 사항인 평화적 핵활동의 권리 등을 보장 받아 미래 핵능력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 할 것임.

(2) 남북관계

- 남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및 정경분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임.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높은 상황임.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도 신정부 초기에 겪었던 남북관계 경색의 시기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정부에 대한 북한의 경색된 대응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과거에 비해 보수적인 정권이라는 점에서 신정부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이 높을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북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의 완전한 단절보다는 정경분리를 통한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임. 즉, 당국간 협의에서는 남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나 양보를 요구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민간교류의 지속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려 할 것임.
 - 민간교류의 영역에서는 내부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남북협력을 지향할 것임. 즉, 민간교류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검증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며, 사업 대상 지역이나 사업 영역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이 정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려 할 것임.
- 남남갈등을 활용한 대정부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내 갈등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한 정부를 우회한 협력구조 구축, 일시적인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숫자가 상당하고 투자 금액이 일정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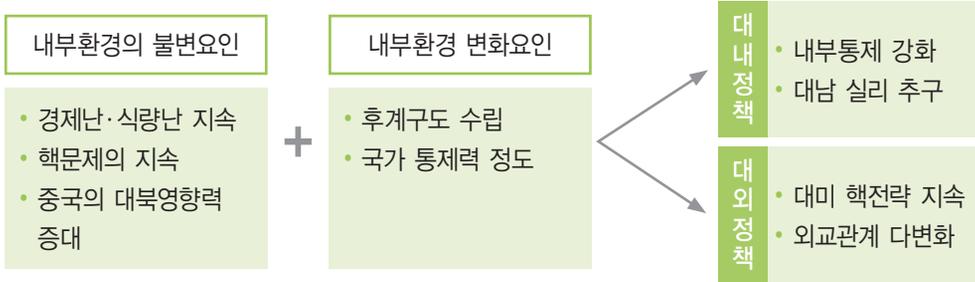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실체가 없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주한미군 철수, 반전평화운동 등과 같은 익숙하면서도 대단히 포괄적이고 혼란스러운 주제들을 활용한 대남 공세를 강화할 수 있음.

(3) 대외관계

- 북·미관계, 남북관계 이외에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임. 6자회담 등의 구조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바, 북한으로서는 북·중 친선관계 자체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는 불가피함.
 - 북한 산업의 생산력이 회복되지 않고,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중국은 북한 내 친미정권의 수립에 가장 거부감을 보일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혼란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임.
- 북·일관계 및 대EU관계 개선 등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기도하겠지만,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기구 가입 여부 등은 대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될 것임.
 - 북한의 공세적인 핵활동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표면적으로 가장 우려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임. 이는 일본의 열망인 ‘정상국가’화의 빌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임. 하지만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북·일관계 개선에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이 한동안 지속된다면 유럽이나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다.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그림 11-1〉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 향후 한동안 북한과 관련하여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것들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내부 환경을 고려할 때, 경제난·식량난의 자체적인 해결 가능성은 거의 없음.
 - 현 북한 지도부가 고려하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비현실적임.
 -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북한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지속될 것임.

- 반면 북한 체제 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는 핵심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김정일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의 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최대의 변수는 후계체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난·식량난의 지속은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통제력 유지 정도 역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임.

- 현 북한 지도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내부적으로 북한은 체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대남정책에 있어 실리 추구,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핵문제를 활용한 버티기 전략, 대외관계 다변화 등을 추구할 것임.
 - 진정한 북한 체제의 변화는 내부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최초의 충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인지 언제 시작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함.
 -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의 북한 지도부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새로운 지도부 역시 쉽사리 또 다른 권위주의 정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전략적인 대북전략이 요구됨.



3. 내부역량

- 신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책 추진역량에 대한 평가 작업도 필요함. 여기서 이와 관련한 내부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것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知彼知己)’에서 ‘지기(知己)’에 해당함.

가. 국민적 합의

- 대북정책은 통일문제, 경협문제, 이산가족문제, 군사적 위협문제, 핵문제, 한미 동맹 등을 포함하는 복합 과제이므로,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조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자, 대북 포용론자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신남남갈등’ 현상이 발생함. 참고로, 원래 ‘남남갈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자 전통적인 ‘안보론자’가 이를 비판하여 발생한 이념 및 정책노선 갈등임.
 - 예들 들면, 2008년 들어 6·15 남북공동선언(2000)과 10·4 남북정상선언¹(2007) 기념행사가 정부의 외면 속에서 이전 정부인사와 대북 포용론자만의 행사로 열렸음.
-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대북정책의 각종 이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줌.²
 - 상호주의 기초의 대북정책 추진 : 64% 지지(전년대비 6% 하락) vs. 지원을 통해 개방유도 24%(전년대비 2% 증가)
 - 남북경협 상호 이익 : 51% 동의(2004년 54%, 2005년 50%, 2006년 40%, 2007년 48%) vs. 17% 반대
 - 남북통일 : 반드시 통일 12% vs. 가급적 통일 55%
 - 북한의 전쟁도발 : 가능성 있음 49% vs. 가능성 없음 15%

¹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

² 『중앙일보』, 국민의식조사, 2008년 9월,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06177>.

- 주한미군 : 주둔 희망 49% vs. 철수 동의 51%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경협 4원칙’은 ‘국민적 합의’와 ‘재정부담 능력’을 포함하며,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현재 ‘국민적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대북정책 노선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강경론 vs. 유화론, 또는 보수론 vs. 진보론 등 양분법이 제시되나, 실제 아래 표와 같이 차별화된 4개 정책노선이 존재하여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임.
 - 따라서 국민적 합의 조성활동은 4개 노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함.

〈표 11-2〉 대북정책 4개 노선

	붕괴론	방치론	전략적 포용론	관용적 포용론
북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 축’ 국가 • 불량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존과 통일 대상 • 협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론 • 포용의 대상
대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붕괴 • 김정일 정권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존 • 북한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공존, 통일
정책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치군사적 수단 • 경제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쇄와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와 압박 병행 •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대화과 수교 • 북한 포용 • 남북정상회담
북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무용론 • 북한 핵무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무용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활용 • 북한 비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수교 • 한반도 비핵지대화

- ‘국민적 합의’는 대북정책의 입안, 추진과 성과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장애 요인임.
 - 극복방안으로써 정치지도자의 대북정책 비전 제시, 정부의 홍보활동 강화, 국회의 대북정책 정쟁화 자제 등이 있음.
-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에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포용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함으로써 ‘신남남갈등’의 배경이 되나, 7월 말 제시한 ‘상생과 공영의 정책’과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 등 3개 공동체 개념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



나. 정부의 정책역량

(1) 정책조정 체계와 역량

- 이명박 신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2008.2.29)하여 새로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등을 설치하였는바, 새로운 정책추진체계는 각종 장점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함.
 - 동 개정은 지난 10년간 소위 'NSC 체제'의 폐단을 들어 동 체제를 폐지하고,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책조정체제로 복귀한 특징이 있음.

〈표 II-3〉 통일외교정책 조정체제 변화

	구체제	신체제
청와대 지휘체계	• 대통령-안보정책실장-수석-비서관	• 대통령-비서실장-수석-비서관
관리조정 체제	• NSC 상임위원회 (의장 : 통일부장관) • NSC 사무처	•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 외교부장관) • 수석비서관실
비서관실	• 전략기획, 정책조정,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4실)	• 대외전략, 외교, 국방, 통일비서관실(4실)

-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외교통일분야 추진체제가 대통령과 청와대 주도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체계이기보다는 부처 중심의 피동적인 상황관리체제라는 지적이 있음.
 - ① 과거 장관급 안보정책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나, 지금은 차관급 외교안보수석이 비서실장 지휘하에 있어 정책 주도력이 약화되었고,
 - ② 과거 기능 중심의 비서관실(전략기획, 정책조정, 정보관리 등)이 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나, 현재 부처명 비서관실(외교, 통일, 국방 등)은 부처의 연락사무소 역할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이전 통일외교정책 전반이 청와대 또는 통일부의 주도로 지나치게 남북관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새로운 외교통일정책 추진 체계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되 더욱 합리적인 집단결정체제를 유지함.
- 외교부 중심의 통일외교정책 추진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보편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남북관계 개선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그 특수성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있음.

(2) 통일외교안보 인력

- 우리의 통일외교정책 추진역량의 하나인 외교안보정책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제시함.
- 1990년대 초·중반 국책연구기관의 외교안보통일정책 연구인력이 100명 수준이었으나 2008년 85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총 연구개발비(인건비 포함)도 1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임.
 - 통일연구원과 세종연구소에서 각각 10명 이상 감소하고, 연구원의 처우 악화로 중진 연구인력이 대거 대학으로 이동함.

〈표 11-4〉 출연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인력과 예산

연구기관명(법적 성격)	총인원(명)	총예산(억 원)	박사연구 인력(명)	연구사업비 (인건비, 연구비, 억 원)*
외교안보연구원(정부기관)	79	120	15	11
통일연구원(정부출연)	68	77	29	40
국방연구원(정부출연)	152	255	23	19
세종연구소(민간)	48	70	17	27
총합계	347명	522억 원	84명	97억 원

주 : * 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연구관련 사업비만 계산.

- 외교분야에서도 탈냉전 이후 외교업무가 폭증하였으나, 외교인력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하여, 외교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급증함.
 - 외교부 인력은 1996년 1,712명에서 2005년 1,57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 100-200명 충원되었지만 인력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우리 외교인력은 우리와 국가 규모가 유사한 주변 중강국과 대부분 서구국가보다 작으며, 심지어 전체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덴마크보다 작은 수준임.
-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이와 관련한 통일외교 업무가 과중하며,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외의존도(75%)를 갖는 통상국가이므로 그만큼 통상의 외교 업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통일과 통상의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통일외교안보 인력의 확보가 긴요함.



- 앞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발, 6자회담의 확대와 실무회담의 상설 가동에 대한 준비, 북한의 핵폐기 기술 지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촉진, 평화포럼 가동 등을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3) 재정능력

- 2008년 9월 통일부가 발표한 ‘10·4 선언 합의사업소요 자원 추계’ 자료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자원개발, 농업협력 등 40여 개 항목을 이행하려면 재정과 민자를 포함해 14조 3,000억 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동원방안과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방안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일부에서는 대북사업이 초기 투자비용은 많지만 남북관계 개선 효과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한다면 수익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추가로 필요함.
 - 참고로, 김영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4 합의에 따른 경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최대 55조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북핵 해결과정에서도 북핵 폐기 지원, 경제에너지 지원, 경수로사업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긴요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아직 충분치 않아 향후 북핵해결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참고로, 비핵화 촉진을 위해 대북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CTR)’ 사업비, 경수로사업비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도 조성해야 함.³⁾

³⁾ CTR은 1991년 미국의 린-루가(Nunn-Lugar) 법안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국가에 산재한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목적으로 해당국가와 협력 하에 추진한 비확산 프로그램으로서 직접적인 핵폐기 지원뿐만 아니라 핵기술자의 전직 교육 및 민수용 과학기술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한국도 참여함.

1. 전략목표

- 신남북협력은 3대 전략목표로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을 설정하였음.
- 비핵·평화
 - 신남북협력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임.
 -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 북핵문제인 만큼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평화구축은 한반도의 안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이자 목표임.
- 개방·개혁
 - 북한의 경제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공급 부족과 생산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의 회생은 요원함.
 -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 사회적 위기는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함.
 -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통한 세계체제로의 편입 없이 폐쇄체제를 유지한 채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북한의 경제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인도적 위기가 재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방·개혁은 필수적임.
- 통합·통일
 - 건국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실현가능성을 염두한 정책 목표라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음.
 - 하지만 북한의 경제문제가 지속되고,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일이 우리의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기존의 방법론으로서의 통일 논의에서 벗어나 남북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2. 추진기조

- 한반도문제 주도권 확보 및 강화
 - 신남북협력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강화하는 것을 1차적인 기조로 삼음.
 - 그간 대북정책 및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나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이 있었음.
 - 비핵과 개방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붕괴 위험을 줄여줌과 동시에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 협력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주도권을 확보 및 확대해야 함.
 - 국제사회 및 6자회담 등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함.
- 남북공동이익 구조 창출
 - 한반도 차원의 개방과 개혁, 경제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은 상호공동이익 추구의 기반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국제협력과 결합된 형태의 적극적인 남북협력 구조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남북협력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선진 한반도 이익 구조의 창출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구사해야 함.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병행추진을 통해서 한반도 경제권 및 동북아경제권 형성과정을 선도하고 북한 개방 및 개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
 -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구현해야 함.
- 국제규범 및 보편가치에의 부합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과 노력들은 비확산, 인권문제 등과 같은 국제규범 및 보편가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임.
 -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분단 고통 해소 및 민족 구성원 간의 화해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국내 여론을 긍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음.
 - 인도주의적 지원 또한 인간안보 증진의 일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3. 추진원칙

- 핵심 목표의 동시병행 추진
 - 신남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전제조건이나 선행단계가 아님.
 - 세 개의 목표가 모두 동시에 추진될 수도, 때로는 어느 두 개의 목표와 조합을 이루어서도 추진될 수 있는 것임.
 - 통합·통일이 신남북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은 분명하나, 통합·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비핵·평화나 개방·개혁과 관련된 정책들과 언제든지 함께 추진될 수 있음.
 - 이는 협력적 평화증진 전략이 추구하는 협력의 방향, 즉 주체간 협력과 분야 간 협력 사의의 연계와도 일맥상통함.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 한반도문제는 이미 국제화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욱 국제화 될 것임.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의 노력이 필요함.
 - 비핵·평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협력이 절실함.
 - 하지만 국제적 수준의 노력이나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우리 정부의 정책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
 -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향상시킬 필요는 있지만, 국제협력의 가속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견제해야 함.

- 국민적 합의에 의한 남북협력 추진
 -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협력의 분야 및 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대북정책 및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단순 지원을 넘어선 대규모 대북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 합의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1. 복합적 평화구조 구축전략

가. 추진환경 : 기회와 위협요인

〈표 IV-1〉 기회와 위협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
북한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개혁·개방 실험 김정일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권력 교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핵개발 지속 김정일 유고와 권력 공백, 권력 투쟁 북한 경제난 식량위기 지속 체제 불안정성 증대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교류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포럼 구성 합의 (9·19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 북한의 통미봉남, 대남 강경책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 개입 가능성
동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자회담 가동 9·19 6자공동성명의 동북아안보협력 및 외무장관회담 합의 다자협력 추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 국가간 상호 불신 역내 군비경쟁 역내 국가간 상호 전략적 불신

나. 새로운 평화구조 추진원칙과 로드맵

- 복합적 평화구조 구축은 북한과의 상생과 공영, 그리고 한반도에 협력적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성숙한 세계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4개 핵심과제, 3개 중점과제, 2개 일반과제가 각각 제시되었음.
 - 이 보고서는 9개 과제 중 평화구조 창출과 직접 관련된 △ 북핵문제 해결, △ 한미 전략동맹 발전, △ 동북아 안보협력 추진, 그리고 이와 별도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4개 과제를 복합적 평화구조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여, 이를 중심으로 서술함.



〈표 IV-2〉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과제

핵심과제 (4개)	중점과제 (3개)	일반과제(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해결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한미 전략동맹 •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들섬 구상 추진 • 동북아 신협력체제구축 (동북아산업협력체제구축) •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 공동체 구축 •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출처 : 『대통령인수위 백서』(2008).

- 6자회담 참여국은 2005년 9·19 6자공동성명에서 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 모색, ② 한반도 평화체제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추진, ③ 북·미, 북·일 양자관계 개선 등에 합의하였는바, 복합적 평화구조 구축 전략은 6자회담 프로세스와 병합 추진이 가능하며, 또한 6자회담 프로세스를 활용하고자 함.
- 복합적 평화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포괄적, 호혜적, 단계적, 동시병행 원칙을 제기함.
 - 포괄성의 원칙은 복합적 평화구조와 관련한 당사국과 관련국의 모든 우려와 관심사항을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경중과 선후는 차별화될 수 있음.
 - 호혜성의 원칙은 일방의 요구를 타방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적인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과 합의의 이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함.
 - 단계적 접근은 긴급하고 타결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이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북·미와 남북간 극심한 상호 불신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함.
 - 다차원적 병행추진 원칙은 관련 프로세스(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등)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며, 만약 이들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진전된다면 상호 보완과 상승작용을 일으키지만, 불균형이 있다면 오히려 타 분야의 진전을 저해할 것임.
- 복합적 평화구조 구축 단계를 ① 평화구조 기반 조성, ② 평화구조 제도화, ③ 평화구조 정착 등 3단계로 나누고, 이 틀에 맞추어 각각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 한미동맹 프로세스의 구체적 이행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함.

〈표 IV-3〉 신평화구조 구축 로드맵

단계	평화구조 기반 조성	평화구조 제도화	평화구조 정착
비핵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능화 및 신고 완료 • 핵폐기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폐기 • IAEA 전면안전조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폐기(핵물질, 핵무기 포함) 완료 • 북한 NTP 복귀
한반도 평화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포럼 가동 • 평화포럼에서 평화체제 로드맵 공동성명 채택 • 남북 군사대화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체제 초기 조치 • 남북미 평화관리 기구 구성 • 남북 군비통제회담 • 유엔사 기능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상태 종료 •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적 보장 • 남북평화관리기구 가동
동북아 평화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 외무장관 회담 • 동북아 안보협력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안보협력체 창설
한미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전략동맹의 비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포괄동맹 진전 •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작전통제권 복구 • 유엔사 해체

다. 4개 이행과제

(1)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 북핵 위기와 핵합의 붕괴의 반복 차단

-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과제의 첫 번째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제기함.
 -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원칙으로 “철저하고 유연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것은 북한 핵무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에 ‘철저’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임.
- 그런데 북핵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1991년 남북 간의 비핵화 협상 이후 17년에 걸친 핵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함.
 - 북핵 협상과정은 ① 북한의 핵도발, ② 핵위기 발생, ③ 일괄타결식 핵합의, ④ 합의 해체 등 4단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핵위기와 핵합의 붕괴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① 미·북간 불신과 적대감 등이 핵협상의 파행을 초래, ② 불완전한 핵합의와 보완 협상의 부재 ③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 불이행 관행, ④ 합의 이행보장 장치 부재 등이 있음.



- 6자회담은 이러한 북핵 협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북핵 해법이 필요함.
- 그런데 6자회담은 과거 남북, 북·미 양자회담에 비하여 안정된 협상 틀을 갖고 있고 또한 보다 효과적인 이행장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참가는 북한의 회담 참여와 합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한반도식’ 비핵화 모델 개발

- 계속되는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핵합의와 이행이 지연되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는 ‘비핵화 모델’이 없기 때문이므로 조속히 ‘한반도식’ 비핵화 모델을 개발해야 함.
- 미 정부는 북핵문제를 ‘리비아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강하여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 북한에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정을 분명히 내리고, ② 미·북 양측의 신뢰를 얻는 중재자가 있어야 하고, ③ 미·북간 사전 비밀협상도 필요하지만, 북핵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되었다는 징후가 없음.
- 우리 정부는 북·미 기본합의문(1994)의 재현에 더욱 관심이 있는바, 북·미 기본합의문은 원래 ‘우크라이나식’ 모델의 변형임. 소련 해체로 2,000여 개의 핵탄두를 계승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 초 미국·러시아와 3국협정을 체결하고 핵을 포기한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보상받았음.
- 그 외 ‘남아공식’과 ‘파키스탄식’, ‘인도식’ 모델 중,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남아공식’으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나 기대하기 어려우며, 인도식과 파키스탄식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북핵 해결에 이미 정해진 모델이나 정답은 없으므로, ‘한반도식’을 개발해야 하는바, 그 내용은 ‘리비아식’과 ‘우크라이나식’의 절충이 될 것으로 봄.

■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한 북핵 돌파구 마련

- 지난 15년간 북핵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미국의 북핵 방치 내지 압박조치는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음.
 - 특히 부시 1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합의 위반을 계기로 기본합의문을 파기한 이후, 북한의 플루토늄 재고량이 3배 이상 증가하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북핵사태가 크게 악화되었음.
- 반면 북한을 상대로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였을 때,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기본합의문, 2005년 6자공동성명과 같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임.
 - 단 북한을 지나치게 관용하는 포용적 접근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합의 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균형된 접근이 필요함.

■ 경수로사업 재추진

- 남한 정부는 미국의 경수로 제공 절대 불가 입장을 감안하여 2005년 7월 12일 경수로를 포기하고 ‘200만 kw 전력 직접송전 제공’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9·19 6자공동성명(2005)에서 경수로 제공 가능성이 다시 열림.
 - 미국 정부는 경수로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며, 경수로 제공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은 ①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② IAEA가 이를 검증하며, ③ NPT와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이에 대한 협력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④ 핵기술 확산을 중단하였을 때로 보고 있음.
 - ※ (2005년 9·19 공동성명 1조)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감안할 때 경수로 제공 없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재추진을 추구함.
 - 참고로, KEDO 경수로사업은 총사업비 46억 달러 중 약 1/3 투입 상태로 종료되었는데, 대북 경수로사업을 재추진 시 KEDO 경수로를 재활용함.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평화체제 추진 경과

-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 평화변영과 국가안보』(2004)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 원칙으로 ① 단계적, 점진적 추진, ② 평화체제 전환까지는 정전체제 준수, ③ 남북당사자 원칙 등 3개 원칙을 제시함.
 - 그리고 단계적 추진원칙에 따라, ①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② 남북협력 심화 및 평화체제 토대 마련, ③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완성 등 3단계를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제시함.
 - 또한 당사자 원칙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이 중심되어 추진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보장을 확보한다는 입장임.
- 노무현 정부 동안 평화체제 구축에서 최대 진전은 9·19 6자공동성명(2005)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하기로 합의한 것임.
- 우리 정부는 ‘선 평화체제 여건 조성(북핵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후 평화체제 제도화(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변경)’의 입장이며, 앞으로 이 입장을 견지함.
 - 이에 반해 북한은 즉각적인 북·미 평화협정과 수교를 주장함.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나, 북핵문제의 해결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따라서 아래에서는 평화포럼 가동에서 평화협정에 이르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제시함.

〈표 IV-4〉 평화체제 관련 조치와 합의 연혁

연대	이행조치와 합의 내용
1953	• 정전협정 체결
1992 - 1996	•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조치 - 종립국감독위 대표 철수 및 사무실 폐쇄 - 북한 군정위 대표 철수 및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 공동경비구역 무장병력 투입 등
1994	• 북한, 북·미 평화협정 제안
1995.8	• 한국,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3원칙 발표 - 남북당사자, 관련국 협조, 남북합의 존중
1996.2	• 북한, 북·미 잠정협정 체결, 북·미 공동군사기구 구성, 유엔사 해체 주장
1996.4	• 한·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제안
1997.12 - 1999.8	• 4자회담 6차 개최(제네바)
1998.10	• 3차 본회담에서 긴장완화, 평화체제 분과위 구성에 합의 - 한·미 : 평화체제 구축, 긴장완화, 신뢰구축 중심 논의 주장 - 북한 : 긴장완화 분과위 의제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제기
2005.9	• 6자공동성명 4항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2006.11	미 부시대통령, 남·북·미 종전선언 서명 용의 표명

■ 평화포럼 가동과 평화체제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핵폐기 협상이 진전되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중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별도 ‘평화포럼(평화체제 4자 협상)’을 개최하고,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함.
 - 평화포럼은 공동성명,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조치, 평화협정 작성을 위한 기본 회담틀로 기능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공동성명’ 합의를 목표로 채택함.
- 평화체제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과 같은 성격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목표와 원칙, 향후 전개방향의 원칙을 포함함.
 - 또한 공동성명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보장을 적시하고, 특히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남북간 ‘잠정적 특수관계’, 상호 불가침, 교류협력의 지속 원칙 등을 재확인함.



■ 평화협정 체결은 최종 단계에서 추진

- 평화협정 체결 등 정전체제의 법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조치는 중장기적 과제로서 핵폐기와 북·미수교 이후로 연기함.
-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단계로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실체적 변화를 초래함.
 - 따라서 평화협정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소멸 및 실질적 평화 정착 이후에 추진함.

(3) 동북아 안보평화협력기구 구성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경과

- 1990년대부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다가,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이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공함.
- 특히 동북아 6개국은 9·19 공동성명(2005)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 하였음.
 - 또한 2·13 합의(2007)에서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Peace and Security Mechanism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6자 장관회담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함.
 - 2007년 3월 16일 북경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1차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회의는 동북아지역 최초의 정부간 다자안보협력대화로 기록되며, 여기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미국측 대표는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해 “가장 긴급한 과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함.
- 아직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6자회담의 진전으로 인하여 동북아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대부분 안보전문가들은 동북아 안보협력이 이상적이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협력 경험이 동북아에 결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그 이유로 ①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체제, 역사, 종교, 문화적인 배경의 동질성이 결여되었고, ② 경제발전 면에서도 격차가 심하며, ③ ASEAN과 같은 안보대화기구가 이미 존

재하여 추가 대화기구의 신설이 어려우며, ④ 공통의 위협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⑤ 한미동맹의 우세와 역내국간 갈등요인의 존재를 들고 있음.

■ 단계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 역내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공감대 구축이 우선 필요함.
 - 역내에는 북핵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급부상과 군현대화,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역내 국가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 과거사문제와 영토 분쟁, 군비 경쟁, WMD 확산, 환경, 마약, 인권, 테러, 난민, 질병 등 많은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산재함.
- 6자회담을 본격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나, 1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기하였듯이 현 단계에서도 역내 해상수색구조 연습을 시행하거나, 공통의 안보협력 목표와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함.
- 6자회담 진전 과정에서 6자 외무장관회담 또는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이것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함.
 - 특히 유럽의 성공적인 다자안보협력체인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CS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와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함.
 -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발족을 앞당기기 위하여, 안보협력체의 공동목표와 가치,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초기 신뢰구축조치 등에 대한 역내 싱크탱크간 공동연구가 필요함.

(4)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

-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해 2개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바, 첫째, 모든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기반이 된다는 입장이며, 둘째, 한미동맹을 통해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입장임.



-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공동의 가치와 이해에 기초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구축하여, 이를 한반도의 장래와 직결된 북한문제 및 동북아지역 정세 관리 등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자 함.
- 한·미 양국은 앞으로 「21세기 한미동맹 공동선언」을 발표해야 함.
 - 이 선언에는 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 확인, ②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력 표명, ③ 지역 및 세계차원에서의 한미협력 촉진, ④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미 양국의 공동 위기관리 추진 등을 포함함.
- 북핵문제의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도 계속하여 진화할 것임.
 - 우선 조속히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을 채택하고, 핵폐기 협상이 완료되고 핵폐기가 진행될 때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의 조정도 가능할 것임.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핵위협이 충분히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때 추진하며, 특히 유엔사 해체는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단계에 맞추어 추진함.

2. 북한의 현대화 촉진 지원전략

가. 북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1) 북한의 경제난 극복 의지

-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근 들어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2008년 공동사설에서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이 최근 제시하고 있는 경제부문 중심과업을 보면 △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의 발전 △ 과학기술중시노선의 관철 △ 인민경제의 기술개선 및 현

대화 △ 인민생활 제일주의 원칙에서 농업생산 증대 및 경공업 활성화 △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 △ 대외경제활동 활성화 등이 있음.

(2) 북한 경제의 도전과 기회

- 북한이 2012년에 경제 강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임.
- 북한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와 있음.
 - 주어진 호기를 잘 활용하고, 직면하는 도전과제는 슬기롭게 극복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표 IV-5〉 북한 경제의 도전과 기회

기 회	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 국제기구의 대북 금융지원 • 6자회담에서 대북지원 논의 : 에너지 등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 동북아의 중심 경제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질 개선을 위한 내부 개혁 조치 •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조 유도 • 북한관료의 시장경제 마인드 전환 • 식량 및 생필품 난 완화 • 북한산업의 정상화 : 공장가동을 제고 • 인프라 구축 : 재원조달문제 해결

(3)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6자회담 전망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회담 개최 결과 내용에서는 일본 등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음.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향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미국과 북한이 상호 협조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존의 6자회담과는 달리 북·미 주도의 실무회담이 될 가능성 높음.
- 미국은 6자회담 성과를 통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미간 합의사항 추인과 핵 검증 의정서 채택, 검증단 구성, 향후 실행일정 등의 문제에서 북한과의 실질적인 합의(성과)를 도출하려고 할 것임.



- 반면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그 성과를 토대로 북한 체제의 불안을 대내외적으로 해소하고 김정일의 견제 과시 등을 보여주려고 할 것임.
- 미국과 북한의 국내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6자회담에서도 양국에서는 소기의 성과(미국은 북핵문제 해결, 북한은 경제적 지원 획득)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정치적인 명분 찾기가 작용)
- 그러나 6자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지만, 일본은 국내의 반발 때문에 6자회담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6자회담 성과를 도출하기 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서 미국이 6자회담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 최종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
 -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북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참여 못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은 북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4) 북한의 현대화를 위한 신남북협력의 필요성

-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신남북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핵 사태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변화 유도과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한 스스로 현대화 작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
 -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면서 미국, 중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생·공영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리더십 대응'이 중요

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남북관계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6자회담 개최에서 우리 정부는 6자 회담에서 참가국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향적인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6자회담 대북 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임.
 -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
 - 6자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도출
 -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차관 도입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차관 도입시 보증을 설 수도 있다는 긍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에너지지원 관련 설비·자재 중 강관 3천 톤 전달 카드를 이용하여, 장관급회담 및 총리회담 개최도 제안
- 6자회담 개최로 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아지면 개성공단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악화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
 - 북한이 향후 관광객 사고가 없도록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 확고한 정경분리 정책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향후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완화될 것이므로, 개성공단 등에 설비반출이 용이하여 북이 바라는 첨단산업 입주도 가능할 것임.
 - 외국기업 투자도 가능할 것이므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
-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가 돼, 오히려 남북관계 및 경협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함.



- 북한은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과의 경험 선호로 전환함으로써 남북과의 경험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다.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 진입 지원전략

(1) 세계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 북한이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북·미, 북·일 수교에 따라 북한은 동북아경제권, 나아가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 그러므로 수교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상정하고 리스크 해소와 내구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임.
-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무역, 투자, 개발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체제의 개혁 및 개방 확대가 필요하나, 북한은 아직 개혁·개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교육, 북한이 수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의견조정 등 다양한 협상이 요구됨.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 가입을 지지하고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
 - 북한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최혜국 지위를 획득해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북·미 및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이 필요
 - 우선 북·미,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북한 스스로 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적 이득 확보를 위해 수출산업 육성, 외자유치 활성화 등 유도
 -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계획 수립 등

- 남한이 정책 컨설팅, 국제경제·무역 교육, 수출 마케팅 지원, 외자유치기관 설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북·미 및 북·일 양자관계의 정상화

- 미국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정에 있었고, 현재에도 미국의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큼.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구축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
-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안보와 경제를 함께 고려하고 동북아의 경제기반건설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동시에 동북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북·미관계는 개선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일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은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정치경제 외교가 국제사회의 기준과 원칙 하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하나의 좌표가 될 것임.
- 북·미, 북·일 양자관계의 정상화 움직임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밀접해지면서 남한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북·일-북·미-남북 3자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도록 전략을 수립
-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
 - 대북 에너지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 정부가 나서 북한의 에너지문제 적극 논의
 - 북·미 및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최혜국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원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에너지지원 관련 설비·자재 전달 카드를 이용하여, 장관급회담 및 총리회담 개최도 제안



-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부분 보증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
- 그러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돼, 오히려 남북관계 및 경협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

(3) 인도적 위기 재발 방지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이 가장 절실한 부분임.
 - 국제 곡물가격 상승, 외부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식량난이 북한의 2차 식량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우려
 - 인도적 위기의 재발은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임.
- 북핵 등 정치·군사적인 이슈에 매달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
 -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량 아사를 막기 위해 제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우리 정부는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그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개입하고 조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 식량 수확 및 부족량 등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 견지
- 북한 경제에 대한 개발지원도 국제원조사회의 빈곤축소를 위한 개발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보건·의료, 농촌개발, 상하수도 등 위생시설, 교육, 전기, 주거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회인프라분야에 대한 개발지원에 충분한 자금이 우선적으로 배분
 -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수송인프라, 통신시설, 전력 등 에너지시설, 수자원개발 등에 관한 경제인프라 개발지원도 빈곤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

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현대화 지원전략

(1) 북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과 주민의 생활향상

- 북한은 주민들의 의식주문제가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 사회적 개발지원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북한의 현실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 지역간 격차 : 평양과 비평양지역, 도시와 농촌
 - 계층간 격차 :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군부와 비군부, 권력자와 비권력자
 - 이러한 현상으로 모든 역량이 평양에 집결되면서 기타지역은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궁핍해 지고 있음.
 - 북한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 개발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중심의 개발은 북한 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개발, 도시인프라 구축, 교육 및 의료사업 등 사회개발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저소득층이 의식주, 교육, 의료혜택, 수도, 도로, 전기 등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개발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협동농장에 대한 지원, 구역 및 군 단위 병원 복구, 예방접종 등
- 따라서 북한 경제발전은 생산의 정상화에 기반한 주민생활 향상이 목표가 우선시 돼야 함.
 - 가동률 30% 수준의 생산기반시설로는 장기적인 경제목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없는 수준임.
 - 인프라, SOC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원부자재의 공급을 통한 생산 정상화는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
- 농업 및 경공업 중시전략으로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을 실현
 - 남북한 농업협력 유망모델(분야, 지역 등 고려)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남북 농업협력지대를 지정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



- 개성·금강산·접경지역을 중심으로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평양·남포·신의주 등 산업단지 인접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10년간 10개 지대 선정)
- 농업현대화 작업을 통해 농촌의 유희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전환
- 3A프로젝트(농업·농촌·농민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형) : 농업생산성 제고 + 영농기반 확충 +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을 병행하는 종합적 개발협력
 - 식량생산 증대 및 농업기술 개선과 영농기반 확충(용배수로 설치, 농업용 지하수 개발, 도정공장, 농기계 정비사업장 건설 등), 농촌생활개선사업(탁아소, 유치원, 병원, 학교, 주택개량, 부엌아궁이 개조 등) 등
 - ※ 당곡리협동농장 성공 모델 벤치마킹 : 농업생산성 향상,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사업, 인도지원 등 팩키지 모델
-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 조기에 수출주력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수출주력산업으로의 육성이 유망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섬유, 의류 등 경공업분야에 대해 생산능력 확충 지원
 - 평양, 남포 등 생산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규모 수출기업 전용공단을 건설하여 남북한 산업협력을 전개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
 - 북한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기업의 학습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국제적 표준을 충족하는 수출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남한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모색
- 북한기업의 능력 향상 지원
 - 남북한 기업간의 분업체계를 구축 : 개성공단 적극 활용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북한기업에 대해 시장 경제교육, 노무·품질관련 기법 전수, 기술자 파견 등 포괄적 지원

(2) 북한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자생력 기반 조성

- 남북한 상이한 사업발전단계, 북한의 낙후된 산업시설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산업생산능력의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협력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북한산업의 현대화를 통해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
 - 북한산업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지원

- 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건설
 - 북한의 전산업과 주민생활의 기초적인 원동력으로서 에너지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회생 도모
 - 남한의 자본과 기술·장비 및 자재 등을 북한의 에너지 개발에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각 가정과 기업소에 공급하여 생산을 비롯한 경제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중유저장시설 설치]

- 북핵문제 해결의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중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 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중유저장 시설을 평양 등지에 5개 정도 설치

[북한의 발전소 개보수 지원]

- 국내 유휴설비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낡은 전력발전소 시설을 개보수
- 동평양화력발전소 등을 개보수하여 공장 가동률 제고 및 평양 주민들의 생활개선 지원

[풍력발전소 건설]

- 북측의 해안지역에 소규모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
- 태양열 난방시설 건설을 통한 북한주민의 겨울철 난방문제 해결
- 우리 정부에서 차관 형태로 개발해 주거나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 그 대가로 광물자원 등을 상환 받는 방식 고려
 - 건설시 대규모 남측 기술자가 상주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전수 및 인적교류 확대도 가능

○ 북한의 산업도로·철도 정비

- 북한의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여 신속한 인적·물적 물류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산업도로 대상 : 평양-원산 도로, 평양-자강도, 개성-평양고속도로 등
- 철도 개보수사업
 - 북한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철도 개보수(평양-신의주 등)
 - 나진-하산 등 국제공조가 가능한 철도 개보수 등

○ 북한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개보수 및 하청공장화

- 북한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공장의 설비를 개보수하여



산업전반의 가동률 제고

- 북한주민들의 물자 부족 해결을 위한 의류 등 경공업 공장과 수출경쟁력이 갖출 수 있는 전기·전자 및 기계공장 등의 공장 중심으로 진행

* 북한의 수출전략 산업 집중 육성 : 지역별·산업별 고려 5년간 100개

- 북한의 주요 공장을 남한 회사의 하청공장화하는 사업
 - 현재 북한은 제철소, 조선소, 기계공장 등에서 일감이 없어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제3국에 새로운 공장 설립을 추진 중
 - 남한의 관련 기업들이 유휴설비를 활용하여 북한의 주요 공장을 개보수하고 하청공장으로 편입시켜 지속적으로 일감을 주는 형태의 산업공장연계사업 추진

○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한 산업연계 특구 조성

- 북한 체제의 한계와 한반도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할 때 남북접경지역을 활용한 산업협력 모색 필요
- 군사적 갈등지역을 산업협력지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추진
- 산업 내 분업 및 산업재배치 등 남북한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하여 남북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조정 도모
 -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의 고도화까지 고려한 지역으로 육성
 - 경기북부 및 수도권과 평양·남포·해주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Cluster) 형태로 발전 모색
 - 서해접경지역은 IT산업 및 경공업수출특구, 중부접경지역은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 특구, 원산 등 동해안 접경지역에는 수산가공 및 조선산업특구와 석유화학산업 특구 등을 설치

(3) 대북 개발협력

-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주민생활과 남북관계 발전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은 맞지만, 과연 투입 대비 성과를 고려할 때 북한의 체질 개선을 통한 변화를 유도했는지, 오히려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더디게 한 측면은 없는지 평가가 필요
 - 따라서 향후 북한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지원 형태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음. 물고기를 주

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비법을 전수

- 국제협력이 구호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대북지원의 성격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남북협력 역시 신경계특구 개발, 인프라 구축 중심의 개발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임.
- 북한 개발지원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발협력 방향에 맞는 단계 설정이 필요
 - 북한은 중장기적인 대규모 개발협력사업보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 협력 사업을 선호 → 10년 내 사회경제문제 해결 목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 악화 이후 향후 북한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경제문제 해결 없이는 체제안정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 앞으로 북한 체제를 통치할 연한이 10년 정도로 판단하고, 10년 내 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개발협력에서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는 가능한 지양하고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를 희망
 - 북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 KEDO사업과 같은 것은 추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반면 진행과정에서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런 사업들은 2순위로 전환
 -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SOC개발사업(항만 등) 같은 경우도 북한 경제에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항만 현대화 작업을 통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더 선호
 - * 예를 들면, 항만을 신규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 북한의 개발협력 방향을 고려하여 북한 개발지원의 시기와 범위, 그리고 속도를 조정
 - 제1단계(초기) : 소규모 개발지원 프로그램 개발·가동하는 데 초점



- 제2단계(중기) : 북한이 점차 대규모 개발지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제고에 초점
- 제3단계(장기) : 북한에 대한 대규모 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갖춘 정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접근

〈표 IV-6〉 북한 개발협력 추진방향

단계	시기	범위 (100기준)	속도	개발지원 수단	참여주체
제1단계	3년 이내	10%	저속	저급 기술 + 정책당국자 인력교육 지원 + 유휴자원 활용(재정지원 최소화)	남한 정부 중심
제2단계	3-7년	30%	중속	중급 기술 + 현장 관료중심의 인력교육 지원 + 기초 시설 투입(부분적인 재정지원 투입)	남한 정부·민간 +국제개발지원기구 + 관련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참가
제3단계	7-10년	60%	고속	고급 기술 + 현장 근로자 중심의 인력교육지원 + 최신 시설 투입(본격적인 재정 투자)	남한 정부·업계 + 국제개발지원 기구 + 제3국 정부·기업

- 개발협력이 북한의 산업 경제 발전과 연계하는 방향에서 추진
 - 단발성 개발협력보다는 북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 인도적 물품지원보다 산업 현대화를 통한 연계생산 선호
 - 기술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
- 사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과 개발지원사업의 목표와 이행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필요
 - 남북한간 긴밀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 북한이 수용 가능토록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북한의 적극적 참여 유도

(4) 남북한의 복합적 추진역량 향상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병행추진으로 한반도 경제권 형성,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편입, 세계경제 안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

- 우선 북한 내부의 개혁추진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체계적,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능력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 확보
 - 북한이 자체적인 개혁·개방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진행
 - 우리와 국제사회는 개혁·개방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북한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현대화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조화로운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관련 규범을 반영하고, 선진 노하우를 전수받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활용
 - 특정 개도국에 대한 협력지원에서 국제협력은 흔히 여러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의 결성을 통해 이루어짐.
 - 국제협력체를 우리 정부가 원만히 조직·주도해 나간다면 북한 경제지원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조를 얻고 가급적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북한 경제지원사업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북한종합지원그룹’을 제안

- 남북한 공동의 지원기구로 ‘북한경제현대화지원추진위원회(가칭)’ 구성
 - 북한 경제의 현대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남북 공동의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북한 경제 현대화를 위한 시장교육

- 북한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인력의 시장경제마인드 제고 교육이 필요함.
 - 북한은 국제화·시장화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
 - * “2005년 11월 내각 지침에서 2002년 7·1조치 이후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조국의 경제 환경에 맞게 외국 투자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따라 세우지 못한 데 있다”고 실토한바 있음.



-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
 -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임.
 - 오히려 인력 양성을 통해 성공적인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체제 안정에도 도움 될 수 있다는 논리 개발이 필요
 - 중국식 시장화와 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면 북한도 쉽게 수용할 것임.
- 수용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확대
 - 북한이 수출입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사회 기준과 절차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인력 양성부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산업경제 전체를 현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발전
- 전문인력 양성기법 수립
 - 전문인력 양성방식도 인력 양성 기법을 마련하여 초기에는 세미나와 해외시찰 등을 통해 시장화 거부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것부터 추진하고 점차 인적교류, 시장화 기초교육 실시, 고급 전문지식 습득 방향으로 접근
- ‘북한경제 현대화 인력 양성센터(가칭)’ 설립
 - 북한인력의 시장경제교육 훈련을 위한 포괄적 대응이 필요. 경제특구 및 산업협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북한인력 양성교육 실시
 - 센터는 개성공단, 금강산지역, 평양 등 북한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국 또는 남한에서도 가능
 - 교육내용은 시장경제의 논리, 북한개발 전략, 경제환경 변화, 해외투자 유치, 국제상거래 원칙, 기업운영 및 관리, 산업기술 등 북한 경제 회생에 필요한 제반 실무교육

3. 통합적 교류협력 전략

- 통합적 교류협력 전략은 신남북협력 구상이 추구하는 ‘통합·통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공동체 형성과 교류협력 방법의 통합이라는 두 방향으로 추진

- 공동체 형성과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적 교류협력 구상이 필요함.
 -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공동체의 형성에 있음.
 - 한반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나 통일과정에 대한 준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이와 함께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준비도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면·다층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 방법의 통합노력이 필요함.
 - 교류협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큰 줄기였음.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증대한 오늘날의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질적 심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다면·다층적 네트워크 교류협력 방식의 통합을 통해 남북한의 통합을 성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남북간 교류협력이 대북 협상력 확보와 주변4국의 북한 흡수 방지 및 한국 주도 통일을 도모하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

가. 기회요인

- 북한의 경제침체로 인한 교류협력 필요성 증대
 -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대외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임.
 - 중국에 의한 북한경제의 잠식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진 일본 및 민족적 관점에서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필요로 함.
- 북한주민의 경제지원 기대
 - 북한주민의 78.8%가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북한주민의 86.3%가 남한의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보며 기대하고 있음.⁴
 - 평양의 당간부들도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일본 조총련 및 중국 조선족 친인척 방문자 보고).

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하나원 교육생 새터민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 (2008.7.24).



- 미국의 적극적 개입 및 북·미관계 개선 예상
 -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교류협력 전략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류문화의 세계적 진출과 북한 내 보급 확산
 -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반도 주변4국의 한민족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교류 전략은 위력 있는 수단임.
 - 북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남한문화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화 교류협력 전략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임.⁵
- 북한과 동북아의 정보화 속도 증대
 - 북한의 사회통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의 발달과 전파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 정보화가 진전될 것이며 북한과의 소통도 늘어날 것임.
-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양적 확대
 - 남북 인적·물적 교류는 연간 17만 명, 17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인적 왕래로 인한 재정수입과 북한의 두 번째 무역 상대국으로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협력을 추동하는 통합적 교류전략 수립 가능

나. 도전요인

- 남한의 경제능력 약화
 - 교류협력 전략은 남한의 경제력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남한의 경제침체와 불안정은 교류협력 전략을 실행하는 데 취약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대북한 교류 강화 및 한류 확산 경계
 -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선점을 하고 있고 최근 단둥, 훈춘 등 동북지역

⁵ 위의 새터민 조사에서 남한의 방송, 영화, 드라마, 음악을 접해본 주민들은 64.7%였음.

개발을 적극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중국은 소수민족의 민족주의 정서 확산을 경계하며 경제·문화 교류를 통한 조선족 사회 결집 및 민족주의 감정 고취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교류협력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움.

○ 문화적 ‘침투’에 대한 북한의 대응

- 북한은 경제협력과 사회교류가 개혁·개방 의식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는 사상문화적 ‘침투’로 경계하고 있음.
- 때문에 북한은 교류협력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사안별로 차별적 대응 및 다각적인 제한조치들을 병행할 것임.

다. 핵심정책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 남북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는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수단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임.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통일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합과정임.
- 남북이 경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북으로 연결된 철도·도로를 이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대륙으로 진출하면 생활공간도 확장됨.
- 통일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며, 상호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통일을 준비

○ 남북 간의 경제협력 진전은 시장확대,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상호보완, 산업구조의 합리화 등으로 남북간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남북주민간 접촉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민족동질성 회복과 공유가치 증대를 촉진함.

- 남북의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의 자생력을 회복시켜 통일비용을 경감시키고 남한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 높음.
- 국내 생산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활로를 제공



- 정치·군사 및 사회·문화분야의 공동체 형성을 선도적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음.
-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지원과 주민 삶의 개선,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얻는 상생의 협력,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북한지역 특구개발, 에너지 협력, 공동단지 개발, 인프라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북한지역 특구 개발과 남북한 연결 추진
 - 경제특구가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출발점이자 토대
 - 경제특구는 대규모의 집단적 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남한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큼.
 - 개성공단의 확대
 - 금강산, 나진·선봉, 신의주, 남포, 원산, 청진 특구 개발
 - 북한지역에 특구가 건설되면 남한과의 연결은 필수적임. 남한과의 연결로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결합
-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남북 에너지 협력
 - 남북한 모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필요
 - 러시아 연해주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 개설 및 남북공동이용 에너지 협력
 -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추진
 -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대가로 남한의 상품과 생필품 공급을 통해 주민 생활 혜택과 자본주의 가치보급의 이중효과
- 청정농산물 및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공동단지 개발
 - 북한지역에 공동 영농단지 개발 및 상품화
 - 러시아 연해주에 영농단지 및 축산업 개발 남북공동 진출
- 인프라 개발협력 및 공동 활용
 -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철도·도로 등 물류인프라, 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 및 공동 활용
 - 중국·러시아 연해주로 연결되는 동해안·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추진문제를 북한과 협의

(2)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변국 한민족 사회 및 북한과의 문화교류 추진

- 남북한과 주변4국의 한민족 사회가 문화예술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의식을 높임.
-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면적, 다층적 네트워크 방식의 교류 구조를 형성하여 주제와 방식 및 교류채널을 다양하게 추진함.
- 남한,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한인들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을 북한이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내 ‘한류’문화와 가치를 확산
- 북한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 조선족 및 일본의 조총련 사회와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북한이 ‘한류’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친인척 방문을 통해 북한과 가장 인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 조선족 사회에 문화콘텐츠 및 시설 지원
 - 일본 조총련 예술단체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한류’ 보급
- 남북한이 민족유대의식과 일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체육 교류를 적극 추진
 - 보천보악단의 서울공연과 남한 가수의 평양공연 등 남북한의 대중예술 교류 및 통일음악회 추진
 - 정례적인 통일축구대회, 북한이 자랑하는 집단체조·교예공연 및 농구·야구 등의 교환경기
- 인적 왕래나 문화예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함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방식과 교류규범을 제도화해야 함.
 -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관련 규정 등을 제시하여 북한이 남한 정책에 맞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남북은 상호이해와 민족의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문화협정을 체결함.
 - 문화협정 체결은 교류협력의 정례화 ⇒ 교류협력의 법제화 ⇒ 문화협정 체결의 순으로 진전시켜 나감.
 - 남북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이행에 기초
 - 서적 및 출판물의 교환, 전시회 및 예술 프로그램의 주선



- 라디오, TV의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
- 언론 및 방송 교류협력에 필요한 재정지원

(3) 학술·문화·관광교류

- 학술교류와 문화유적지 발굴·보호, 관광산업 개발 등을 협력함으로써 남북의 공동이익을 추구함.
- 고구려사, 독도문제 등 역사·영토문제를 포함한 한국학(조선학)분야의 공동연구
 - 통일과정에서 중국·일본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역사·영토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
 - 고고학, 고구려사, 발해사, 독립운동사 등의 영역은 남북이 함께 연구하고 학술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 주제영역
 - 북한은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을 격렬히 비판하고 있으나, 고구려사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음.
 - 남북한 학자들이 적극 협력하여 객관적 사료에 의한 동북아 ‘시민사회 차원’의 남북협력 및 국가간 협력을 주도해 나갈.
- 경제협력에 필요한 학술교류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긴요한 남북간 경제협력은 경제 분야의 학술교류를 바탕으로 해야 방향성 있는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과 학술교류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철도·도로 설치·연결문제,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
 - 첨단산업 개발에 필요한 IT 등 과학기술분야 학술협력
- 민족동질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남북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언어 영역의 연구와 협력
 - 2013년에 발간할 『겨레말큰사전』 등 남북의 언어학자들의 교류와 공동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문화통합사업임.
- 문화유적지 공동 발굴·보호
 - 북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원하는 분야의 공동발굴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협력을 도모

- 평양의 고구려 유적, 개성의 고려 유적, 금강산의 불교 관련 유적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로 세 지역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
- 문화유적지 답사 및 취재, 국토순례대행진 등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
 - 남북한에 보존되어 있는 많은 문화유적을 답사 및 견학함으로써 남북의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음.
- 문화유적지 및 개발지역과 연계한 관광교류
 - 북한의 지역 개방과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관광교류를 추진
 - 금강산 이외에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관광산업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의 공동이익 도모
 - 인근도시 및 경제개발(특구)단지와 연계관광 추진

(4) 인도주의 및 북한 인권문제의 포괄적 해결

- 남북간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상황 개선을 도모하는 통합적 교류협력 전략이 필요함.
 - 북한의 인권·인도주의 문제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진전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실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인도주의 지원문제와 인권문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북한 인권문제는 인적 접촉,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분리·병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적 접촉(human contact) 사안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한 당국이 협상으로 풀어야 할 현안
 - 인도주의 사안(humanitarian issue)은 북한의 기아·생존권에 관한 문제
 - 정치적 인권(human rights) 사안은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과 같은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
- 인적 접촉, 인도주의, 정치적 인권의 세 영역은 각각 다른 원칙과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
 - 인적 접촉 사안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 인도주의 사안은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로 조건 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한



모럴파워(moral power) 활용

- 정치적 인권 사안은 국제사회 및 NGO와 역할분담을 통해 접근
- 각 범주별로 사안을 분리하여 정책을 추진하되 인적 접촉 ⇒ 인도주의 ⇒ 정치적 인권의 방향으로 순차적 혹은 분리·병행 추진
 - 인적 접촉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동시에 병행하며, 정치적 인권은 나중에 다루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 세 영역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동시에 다루는 방안도 가능
- 이산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인도주의 분야의 유력한 쟁점임.
 - 이산가족문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호소력 있는 한반도문제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력한 사안임.
 - 이산가족상봉에 따르는 외부정보 유입이라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북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음.
 - 김일성 주석도 생전에 언급(평방, 1998.4.8)한 적이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덕정치’, ‘광폭정치’ 실현이라는 대내 정치적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
- 남북 간에 분단과 전쟁으로 야기된 여러 인도주의 문제들에 대해 이념논쟁을 배제하고 민족화해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풀어나감.
 - 이산가족(월남자, 월북자), 납북자, 비전향장기수(북한), 국군포로 등은 보편적 가족상봉의 문제로 부각시킴.
 - 60년이 되도록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이념과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계와 민족 앞에 부끄러운 일임을 강조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봉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상봉의 정례화 및 상호방문의 제도화를 추진함.
 - 생사확인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 금강산뿐 아니라 판문점에도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을 정례화하고,
 - 가족과 친척 방문을 제도화함.
- 특히 이산가족들의 대규모 고향방문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여 1세대 이산가족들이 자신들의 고향땅을 한번이라도 밟을 수 있도록 배려
 - 1개월에 1만 명씩 고향방문을 실시하여 1년 동안 10만 명의 고향방문을 실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남북자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함.
 - 480명의 납북자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낸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 납북사건 가운데 우리 정보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여, 정보기관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납북자에 대해서는 가족상봉의 차원에서 송환을 요구함.
 - 전향장기수에 대한 복송을 요구할 경우, 인권차원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이를 적극 활용하여 납북자문제를 풀어나감.
 - 납북자 문제제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 인권문제의 포괄적 타결에 협력할 경우, 북한에 대해 추가적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함.
-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환경 개선, 특히 취약 계층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에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인도주의 협력 추진
 - 통합적 교류협력 전략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 특히 취약계층이나 재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략과제로 남북 인도주의 대화 개시
 - 인도주의·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인도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함.
 - 이산가족, 납북자, 장기수, 국군포로 등 ‘인적 접촉’ 문제를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 추진
 - 2000년대에 진행된 북한-유럽연합간 인권대화 및 냉전기 유럽의 헬싱키협정을 참고
 - 인도주의 지원문제를 병행하고, 점차 인권대화로 진전시켜 나감.
- 남북적십자사를 적극 활용
 - 인도주의 지원 및 당국간 인도주의 대화의 실질적 창구로서 남북적십자사를 활용
 - 인권문제를 비정치적, 보편적 인도주의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방안

- 필요시 국제적십자사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국제협력을 도모함.

(5) 민족적 재난·재해에 대한 공동대책 강구

- 북한의 재난·재해에 긴급구호 및 복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협력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줄여나감.
 - 민족의 재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협력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북한의 재해·재난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남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가 높으므로 남한이 적극 개입하여 한반도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함.
- 북한의 경제침체에 따른 장비 및 재정 부족으로 자연재해나 인공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재난시 신속한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함.
 - 남북의 어느 한쪽이 재해와 재난에 직면할 경우, 남북공동으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남북의 자연재해와 인공재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남북공동 재해대책 기구를 구성함.
 - 잦은 홍수피해와 용천사고와 같은 대형참사의 긴급구호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민족재난·재해 공동대책위원회, 한반도 재난·재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명칭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환경과 보건분야에서 미래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형 협력사업을 추진함.
 -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림녹화 사업을 지원하고,
 -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존과 공동개발 및 임진강 수해방지 등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 보건·의료분야의 긴급구호를 위한 의약품과 구호식량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

(6) 통합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

- 남북간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적 심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다면·다층적 교류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화 작업이 필수적임.
-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하기 위한 ‘3통협정’, 즉 통행, 통신, 통상 협정을 체결함.
 - 남북한 주민의 인적 왕래에 따른 신변보호 및 통관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 개성, 금강산 등 특별구역과 기타지역에 대한 항공, 선박 및 승용차 이용규정을 명시하며,
 - 우편과 전화, 팩스 등 전기통신분야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송금 및 재산이전(증여·상속) 등을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
- 3통문제 해결은 북한 개방의 핵심적 관건임.
 -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3통문제가 북한 전역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북한 개방은 완료 직전 상태에 이룸.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남북FTA 체결 추진
 -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중국-홍콩간 체결한(2003.6) CEPA(경제협력 강화약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사례를 준용
- 북한 개방시대를 내다보며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중국 및 러시아와 통행협상 추진을 준비함.
 - 자동차·철도를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국과 통행협상 방안을 준비
- 경제협력과 학술교류, 인도주의 지원 등 다면적 네트워크로 진행되는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교류전략을 구사해야 함.
 - 경제협력 및 문화예술 등 각 영역에서의 교류를 학술교류과 인도주의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식의 균형 잡힌 교류 추진
 - 학술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문화교류협력의 실효성, 방향성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주의 대북지원을 통합하는 교류전략도 필요
 - 인도주의 지원활동이 단순 지원을 넘어 개발협력 및 학술·예술·경제 협력의



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교류협력의 진전 속도에 맞게 남북간 학술교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경제개발계획, 통행·통신의 설치와 연결문제, 첨단산업 및 정보산업 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교류를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추진
-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이 없이는 남한의 경제성장과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군사협력과 경제교류, 문화협력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심화시켜 대북 정치·군사 협상력을 확보하는 교류협력 전략 구상
 -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 의존하게 되면 북한의 정치지도자들도 남한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됨.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를 높이는 남북교류협력은 결국 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실현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정책임.
 - 한국은 2000년부터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제2무역 상대국임. 연간교류 17억 달러, 지원 2억 7천만 달러로 북한의 대남의존도는 2.7%(공식환율)-50%(시장환율)임.
- 중국·일본 등 주변4국의 북한 흡수 방지 및 한국 주도 통일을 도모하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
 -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국익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주변국과의 외교를 주도하면서 한국의 외교역량을 발휘하려면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함.
 -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대북 선점을 방지하고 남한의 북한 선점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교류협력이 되어야 함.

- 통합적 교류협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경제사회개발 종합계획’의 구상 하에 세부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함.
 - 통일 이후 남북간 지역불균형 해소 및 남북 사회통합에 대비한 북한의 종합적 경제사회개발 구상을 준비
 -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개발·개방지역으로의 송전 및 인도주의 지원을 대북 인센티브 제공 수단으로 활용
 -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을 통해 자유·평화·민족의 가치 확산과 유대감 형성 및 시민사회 발전 도모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1. 한반도형 CTR 프로그램 추진

가. 배경 및 고려사항

-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단독으로 구소련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관련된 과학자의 전직(轉職)훈련을 위해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CTR)’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2년부터 CTR을 ‘G-8 WMD 확산방지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MD)’으로 확대함.
 - 2002년 6월 G-8 정상회의는 2002-2012년 10년간 핵폐기 사업비 200억 달러를 조성하고, 미국이 100억 달러, 나머지는 다른 참여국이 기여기로 합의함.
-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4년 2월 미 국방대학교 연설에서 모든 나라에게 G-8 글로벌파트너십 참여를 권유함에 따라, 한국도 구소련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핵잠수함 해체, 국제과학기술센터 건립 프로젝트에 기금을 기여함.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비확산, 특히 CTR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2005년 리차드 루가(Richard Lugar) 의원(공화당)과 같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TR 현장을 시찰하였음.
 - CTR 프로그램은 원래 ‘넌-루가 구상’으로 불리는데, 샘 넌(Sam Nunn) 상원의원(민주당)이 은퇴한 후 오바마가 넌 의원의 역할을 대신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루가 의원과 공동으로 ‘오바마-루가 구상’을 주창하여, 폐기지원 대상을 WMD에서 재래식 무기로 확대하고, WMD와 핵물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비확산외교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의 비확산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을 거부하고 더욱 공세적이고 지속적인 양자대화를 주장함에 따라, CTR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 미 정부는 CTR을 아직 구소련지역에 한정되나, 이를 확대할 경우 북한이 최우선 대상국 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 CTR 발의자 중 한 명인 샘 넌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2006.10.9) 직후 성명문을 내어 대북 ‘포괄적 접근’을 주장하고 아래의 5개 항을 제기한바, 향후 북핵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① 핵물질 사찰 및 전용방지 감시체제 강화
- ② 핵무기 비확산을 강화하고 민수용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지원
- ③ 핵물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 ④ 비확산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년-루가형 프로그램 개발
- ⑤ 전 세계의 핵무기용 핵물질 확보와 제거
- 동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CTR 프로그램과 경수로 제공을 가능케 하는 획기적인 방안임.
- 대북 CTR에 대한 연구로 조엘 위트(Joel S. Wit) 전 국무부 관리가 2005년 발표한 대북 CTR 보고서(미전략안보연구소, CSIS), 그리고 동인(同人)이 미국 전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공동연구 중 대북 CTR 과제가 있음.
 - 국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현재 대북 CTR 연구를 추진 중임.

나. 대응전략

- 첫째, 대북 CTR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외 원자력 및 비확산 전문가로 구성된 ‘CTR 실무 TF’ 구성을 제기함.
 - CTR 실무 TF는 미 CTR 정책 일반, 대북 CTR 추진 동향, 대북 CTR 추진 방안(로드맵), 대북 CTR 사업비 등을 검토함.
- 둘째, 아직 국내 CTR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미하므로 CTR에 대한 지식 축적을 위해 연구과제 발주, 한미 또는 G-8 CTR 전문가 워크숍, 한미공동연구 등을 추진함.
- 셋째, 대북 CTR 프로그램으로 핵시설 폐기, 과학자 전직훈련, 국제과학기술센터 건립, 비확산 및 수출통제체제 구축 지원 등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중심으로 추진방안과 사업비를 추정함.
 - 특히 6자회담을 중심으로 CTR을 추진하는 것이 실현성을 높이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철하는 방안을 강구함.
 - 또한 북핵 폐기에 있어 고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친환경적인 폐기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

가. 배경 및 고려사항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북한 체제위기 심화, 탈북자 증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권력투쟁 및 권력공백 가능성,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국의 협의 또는 공동대응 필요성이 대두됨.
- 북한은 이미 '실패정권/국가(failed regime/state)'로 낙인 찍혀 있는데다 체제 위기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마저 등장하면서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함.
- 최근 미·중간 북한의 미래를 염두에 둔 전략대화 추진설이 등장함에 따라, 미·중 양국이 한반도문제를 결정하는 사태를 미연에 저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서, 그리고 북한문제의 최대 당사국인 한·미·중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장치로서 한·미·중 전략대화가 필요함.
- 한국은 1990년대까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초 북핵문제 발생으로 인해 북미대화 개시, 1990년대 중반 이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개시 이후 사안에 따라 '북한문제의 국제화'를 수용함.
 - 그러나 사안에 따라 참여자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나. 대응책

- 북한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목표로 '트랙 2' 또는 '트랙 1.5' 차원에서 한·미·중 전략대화를 제기함.
 - 특히 중국은 정부 또는 비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한·미·중 회의가 자칫 대북 압박 연대로 비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함.
 - 따라서 '트랙 1.5' 차원에서 우선 북한정세분석, 북핵해결방안, 개혁·개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전 신뢰구축작업이 필요함.

- 한·미·중 전략대화가 제도화되면 점차 북한의 미래, 북한경제발전 지원방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급변사태 대비, 탈북자 대량발생 대비 등으로 안건을 확대함.

3. 지역경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가. 추진배경 및 전략환경

- 미국발 금융 위기의 확산과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국제 질서의 안정적·효율적 관리 기제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자주의 진전은 미국의 기득권 유지 노력과 기타 각국의 이해 상충 등으로 단시간 내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자간 무역 체제가 보호무역주의 경향 고조로 동요되고, 새로운 금융 질서의 구축이 어려워질 경우, 각국은 인접국과의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당면한 제반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하는 지역협력은 오히려 가속력을 얻게 될 것임.
- 동(북)아시아지역 다자협력의 유용성 증대와 관련된 또 다른 발전은 2000년을 전후로 종래 이 지역에서 다자 접근 방식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이었던 중국과 미국이 점차 다자협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오고 있다는 것임.
- 중국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발생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이 체되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 성장을 자산으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한 이래, 이 지역에서의 경제 및 안보 협력에 대한 기본자세를 적극화시켜 오고 있음.
 - 이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된 국가적 자신감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다자포럼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도 내재해 있음.
- 다수의 양자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역 다자협력을 자국 배제 또는 영향력 감소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아 왔으나, 중국의 다자협력에 대한 태도 변화의 대응책 모색 필요성과, 특히 2001년 9.11 사태 이후 반테러·반확산을 위

한 국제협력의 동원 필요성 등으로 다자 접근에 대해 점차 수용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됨.

- 또한 전략적 경쟁자/전략적 동반자의 양면성을 지니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최근 협력적 측면의 상대적 강화 또한 다자협력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우선 견제 대상(focused target)’이 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가 오히려 급부상하는 중국을 통제불능(out of control)의 행위자로 만들 위험성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다자 접근을 일종의 완충 기제로 본다는 것임.
- 즉, 미·중 양국은 각각 상대국을 위협은 축소하고 기회는 확대하는 ‘위험 회피적 관여 정책(hedging engagement policy)’의 대상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다자 기제를 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다자협력도 점차 추동력을 얻고 있음.
-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이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오바마 신행정부는 다자주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주목해봐야 할 것임.
- 이러한 양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APEC의 틀 속에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조성할 수도 있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는 ASEAN+3를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동북아시아에서는 한·중·일 간의 제반 지역협력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의 여러 지역 단위에서 협력 동기가 재강화됨으로써, 기존의 지역협력 전략을 재검토·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임.

나. 남한의 지역경제협력 전략

- 그간 남한은 김영삼 행정부 당시에는 APEC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 김대중 행정부는 ASEAN+3을 통해 동아시아에 전략적 초점을 둔데 이어, 노무현 행

정부에서는 평화·번영 정책의 틀 속에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지역협력의 중요성과 접근 전략이 수시로 변동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역협력 전략의 전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도 존재해 왔음.

- 최근 예상되는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의 다자주의 강화와 중국의 다자협력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역내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향후 한국은 아·태-동아시아-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지역 경제협력 기제들에 대등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 추진의 전략’을 채택하되, 각 지역 차원 간에 존재하는 진전 정도의 차이를 우선 좁히는 데 관심을 두는 ‘취약점 보완의 전술’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협력 전략은 한국의 협상 입지 강화를 목표로 두고 출발해야 하므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경제권’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즉, 새로운 국제 환경 하에서 한국의 지역협력 전략은 ‘한반도 경제권’을 핵으로 하면서 아·태지역에서의 APEC, 동아시아에서의 ASEAN+3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한·중·일 3각협력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2+3’ 전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북한개발지원그룹(가칭) 설립

가. 필요성 및 목적

- 북한개발지원그룹은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유도 및 사전실태파악,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적
 - *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은행이 주도하여 1966년에 대(對)한국경제협의체(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Republic of Korea : IECOK)가 결성된 사례가 있으며, 이 협의체는 한국에 대한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를 조정, 주선하는 기능을 수행

- 개발조정그룹(development coordination group)의 한 형태로서 북한개발 관련 사업수행과 기술 및 금융지원을 하는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 개발조정은 북한개발을 위한 각국 참여자들의 지원을 북한 전체의 개발목표와 전략에 맞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
- 개발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각국이 북한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지원창구가 다양하고 또한 각각의 지원단체나 자금 공여자들의 지원원칙, 지원우선순위,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북한개발지원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원효과도 감소하기 때문
- 북한의 국제개발기구 및 금융기구 가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가입하더라도 본격적 대규모 개발지원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북한개발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잠정적인 북한개발지원 메커니즘이 필요

나. 참가범위

- 개발지원그룹의 참가범위는 북한개발지원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주체가 참여
 - 주요 원조국(남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UNDP 등 관련 유엔기구, 주요 국제개발 및 금융기구(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원조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북한개발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
- 북한개발에 대한 직접지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원국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강화
 - NGO를 통한 개발지원이 공적개발(정부 차원)을 통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개발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며, 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개발사안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혁신적이며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음.

다. 추진주체

- (1안) 남한 정부 또는 6자회담 협의체가 전면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남한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 (2안) 이 기구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틀을 원용하여 6자회담 참여국과 EU, 호주 등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6자회담 참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KEDO이사회는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나, KEDO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EU 및 EU내 개별국가, 캐나다, 호주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3안) UNDP, 세계은행 등의 국제개발 및 금융기구가 나서서 추진하는 방안과, 북한을 APEC에 (준)회원국으로 가입시켜 APEC가 주도하는 방안도 검토

라. 추진단계

- 일정기간 협의그룹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
 - 북한이 국제개발 및 금융기구로부터의 개발지원이 가능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기구
- 개발지원그룹은 그 성격상 잠정적인 원조조정 협의체로서, 구성 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표준적인 형태의 원조조정그룹으로 전환됨.
-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이전이라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개발지원그룹을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으로 전환하거나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 CG)'으로 바로 전환시키는 방안
 -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협의그룹(CG)의 역할을 하는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이 기구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NEAIDO)’로 개편하여 동북아의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개발 계획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NEAIDO)’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와 더불어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양축을 이루게 될 것임.

마. 기대효과

- 개발지원그룹과 같은 다자간 채널을 통해 북한 개발을 지원할 경우 정치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북한개발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발지원그룹이 한반도 관련 국가들 간의 북한 지원에 따른 이해를 조정하는 잠정적인 틀이 될 수 있음.
 - 남한 입장에서는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통하여 부족한 국내 재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지원그룹을 통하여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지원에서 남한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

바. 추진과제

- 투자재원 파악 :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실태파악이 중요한데, 가능하면 북한 당국과 함께 상세한 기반시설 소요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합리적인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 계획 수립시 남한의 남북경협계획 및 관련국들의 지역개발계획과 조율하는 작업도 필요
 - 개발계획은 순서(sequencing)와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가능한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개발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UN이나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하에 북한개발지원그룹 사무국 주관으로 북한의 개발집행능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관 직원의 훈련 및 교육을 추진

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기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반드시 인적 역량 확보 (capacity building)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토록 할 필요
- 이 기구가 설립되면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기존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
 - 다자간 협력체의 구성 및 추진에 있어서 국제연합기구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안별로 국제기구들이 갖고 있는 기존 계획이나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5. 민족재난 사태에 대한 공동대비

가. 북한 사회의 현실과 민족재난 사태

(1) 식량난 등 인도적 문제

-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는 구조화되고 있음. 북한 경제가 자생적인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식량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음.

〈표 V-1〉 북한 식량 수급 및 부족량(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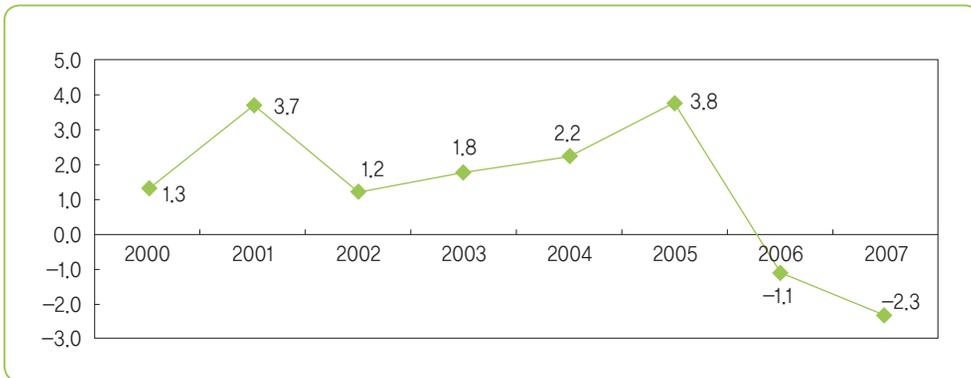
	수요량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2009	-	468	-
2008 ⁴	540	401	-139
2007	543	448	-95
2006	560	454	-106
2005	545	431	-114
2004	548	425	-123

⁶ 2008년까지의 연도별 곡물수급 상황은 국회 이미경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서 참고. 2009년 상황(2008년도 생산량 468만 톤)은 2008년 10월 29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

- 2008년도 식량 사정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더구나 1999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던 북한 경제는 200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식량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그림 V-1〉 북한 경제 성장률

(단위 : %)



-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공급 부족과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 등이 겹쳐 결핵 등의 질병이 만연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임신부와 어린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함. 어린이들의 상장발육 부진은 통일 이후를 고려할 때,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의 방역체계 붕괴로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말라리아 환자의 증가로 현혈이 불가능한 실정어서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 등에 대한 공동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임.

(2) 에너지 부족 및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

- 북한의 경제난은 에너지 등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족은 북한 경제의 회생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에너지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자원이 부족한 남한으로서도 시베리아 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음. 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남북공동이용은 통일 시대 남북협력의 새로운 아이템이 될 전망이다.
 - 북한에는 약 360여 종의 지하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40여 종이 경제적 유용성⁷⁾이 있는 광물로 추정됨. 이 가운데 매장량이 세계 10위 권 광물 7종(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한과의 자원 공동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광물자원 자급율이 10.1%에 불과한 남한에게는 수입물량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효과가 예상됨.

〈표 V-2〉 주요 광물에 대한 남한의 내수규모와 북한의 보유규모

구분	한국 보유규모 및 자급률			북한보유규모	내수의 25% 북한조달시 가용연한
	보유규모	내수규모	자급율		
철광석	5천 억 원	2조 3천 억 원	0.4%	73조 8천 억 원	128년
아연	3천 억 원	1조 4천 억 원	0%	9조 원	26년
마그네사이트	-	5백 억 원	0%	126조 원	10,080년
금	5천 억 원	8천 억 원	3.8%	23조 4천 억 원	117년
기타	93.7조 원	7조 원	16.2%	2,055조 3천 억 원	1,174년
계	95조 원	11조 5천 억 원	10.1%	2,287조 5천 억 원	796년

주 : 가용연한=북한잠재 보유규모÷(남측내수 규모×북한의 부담비율).

출처 :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또한 북한은 남북 공동수계를 형성하고 있는 임진강·북한강 수계에 유역변경 식 댐(황강댐·임남댐 등)을 건설하여 물길을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와 북한강 중류지역에 물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북한 사회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남북협력을 통해 풀어야만 하는 문제들 가운데 통일 시대를 고려하였을 때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거나, 통일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문제들을 민족 재난 사태라고 할 수 있음.

⁷⁾ 지하자원은 ① 자연상태의 천연자원 ② 자연상태의 자원을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이 가능한 자원 ③ 기술로 개발하는 자원 중에 경제성이 있는 자원 등 세 가지로 분류.

나. 남북한 협력 실태 및 정책과제

- 대북 식량지원은 추진 여력도 있고, 명분도 있으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식량문제 등 인도적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생적인 식량 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임.
- 에너지문제의 경우 대북 직접 송전 등이 제기된바 있으나 북측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으며, 자원의 공동이용이나 시베리아 자원 이용 관련 남북 협의는 본격화되지 못하였음.
 - 임진강 수계의 공동이용 관련 논의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접경지역 공동방역 방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다. 협력방안

- 추진기조
 - 남북 간에 기 합의되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 확대
 - 일방적 지원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둔 접근
 - 일회성 사업보다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지향
- 인도적 문제
 -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국제기구 등과 협조하여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제공
 -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협동농장체계의 개편을 염두에 둔 농업 증산 추진
 - △ 제1단계 : 농업 증산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농기자재, 비료, 농법 등 기술지원 제공
 - 생산물의 소비보다는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 및 재투자 개념 교육
 - 남한·개성공단 등 북한 내 특구지역, 혹은 해외 시장을 통한 판로개척
 - 생산된 잉여의 재투자를 통해 남측의 지원을 줄이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성공사례 창출

△ 제2단계 : 시범 사업의 성과 확산

- 시범사업의 확산을 통해 북한 사회 전반의 식량 증산 및 자생력 제고
- 남북 지방간 연계를 통한 주민간, 지역간 교류 확대

○ 접경지역 협력체계 구축

-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기 합의 사항과 경기도 및 강원도가 추진 중인 공동 방역방재 사업 등을 확대 발전시킴.
- 장기적으로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제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지향

△ 제1단계 : 공동수계 관리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임진강 수계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 사항 추진 및 사업 범위 확대
- 말라리아, 솔잎혹파리 방역 사업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체계로 확대 발전시킴.
- 특히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때, 생태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동시 추진

△ 제2단계 : 접경지역 공동 관리를 위한 특별 협의기구⁸ 제도화

- DMZ관리청(가칭) 혹은 관리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는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2조.⁹
- 동 조항의 근거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감.
- 초기에는 남북한의 대표와 UN 관장하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등으로

⁸ 독일의 경우 1973년 1월 31일 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부속의정서에 따라 양독간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를 설치하여 운영한바 있음. 동 위원회는 국경선 통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수자원, 에너지 공급, 재해방지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국경위원회에는 동서독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임명된 대표단이 파견되었음. 서독의 대표단은 내무성 직원을 단장으로 내독관계성, 재무성, 동독과 국경을 접한 4개주(바이에른, 니더작센, 헤센, 쉐레스비히-홀슈타인)의 대표로 구성되었음. 동독은 외무성 직원을 단장으로 국방성(국경수비대), 환경 및 수자원 보호성, 내무성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 양독간 국경위원회는 특히 수자원, 에너지 공급과 재해방지문제를 다루었음. 국경위원회 회의는 통상 1년에 4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음.

⁹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구성되는 협의체의 성격으로 출발하게 될 것임. 동 협의체는 생태·환경은 물론이고, 남북한 산업·에너지·공동수계 관리 및 수해 등 재난 관리 등의 다양한 문제 영역들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임.

- 이러한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에는 비무장지대를 특별 행정 구역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DMZ관리청으로 발전시킴. 이는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전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그림 V-2〉 DMZ관리 협의체(안)



6. 역사·영토문제 공동대처

가. 기본방향

- 통일과정에서 중국·일본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역사·영토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도록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함.
- 고구려사와 독도문제 등에 관한 남북학자들의 학술토론회 및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지원함.
- 역사·영토문제에 남북이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공동대응함으로써 동북아 '시민사회 차원'의 지지 형성 및 국가간 협력을 이끌어 나감.

나. 추진방법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동해 영토표기 및 중국의 동북공정문제 등 역사·영토문제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이슈들을 대응 주제로 선정함.
 - 2004년 2월 평양토론회에 100여 명의 남측 학자들이 방북하여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관한 남북토론회'와 '일제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 공동자료전시회'를 개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음.
 - 북한은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을 격렬히 비판하고 있으나, 고구려사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역사·영토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고구려사, 발해사, 독립운동사 등을 주제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개성 등의 유적발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2004년 9월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학술토론회'(금강산)를 개최한바 있음.
 - 평양의 고구려 유적과 개성의 고려유적 등에 관한 공동연구 및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공동학술세미나 등 학술적 교류를 추진함.

- 역사·영토문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제학술기관에서의 활동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여감.
 - 역사문화재 보호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 독도문제, 동해표기 등 영토문제에 관한 남북한 공동의 국제활동을 적극 지원

다. 추진협력기관

- 남북역사학자협의회(2004.2 결성),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의 학술분과, 남북해외학자통일회의, 국제고려학회 학술분과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매년 2월과 8월 공동학술회의 개최에 합의한바 있으며, 주로 일본문제와 고구려문제를 통해 남북간 학술교류를 이어왔음.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는 2009년 8-9월 평양에서 제9차 세계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정부차원 혹은 반관반민 성격의 ‘남북역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영토문제에 관한 남북학술교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음.

라. 정부지원 방안

- 정부 당국간 ‘남북사회문화교류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의 학술활동을 측면 지원함.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및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2003.7.12)에서 남북사회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기구 구성에 합의
 -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9조 세부 항목에 정보자료 교환, 연구·조사·편찬사업 공동실시 및 전시회 진행 등을 합의한바 있음.
- 남북학술교류진흥원(가칭)을 신설하여 남북학술문화교류를 총괄하고 역사·영토문제에 관한 자료구축 및 정보제공, 북측협력 파트너 중재, 재정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학술문화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민간협력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강구



- 북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지원 및 교육·정보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
- 북한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국 등 국제 학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 남북한과 중국의 조선족 동포학자와 함께 3자공동학술기구를 설립하거나,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학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강구

한반도형 협력적 위협감축 추진방안

부록



1. 협력적 위협감축 개요

- 본 부록을 작성한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을 감축하려는 ‘대북 협력적 위협감축(CTR-NK) 프로그램(가칭)’를 설명한 후 그 유용성과 함의를 논하고, 동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하여 남북협력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가.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램

■ 성립 배경 및 경과

-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으로부터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을 동맹유지와 미군의 전진배치, 군비통제 제안 등으로 억제할 수 있었으나, 냉전 이후 시대에는 주로 구소련 공화국들의 WMD 확산이라는 새로운 안보 도전의 대두로 핵 위협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아래의 <표 부록-1>과 같이 성공적인 외교 전략과 CTR 추진으로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즉 미국으로서는 소련이라는 전통적 핵 경쟁국과는 다른 새로운 적대세력들(특히 북한, 이라크, 이란)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었음.
 - 1992-94년 소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고, 북한은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한바 있음.
 - 미 국무부 대북협상팀(갈루치 팀장)은 북한과 약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경수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전략의 패러다임은 <표 부록-1>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소련 위협 억제 → 소극적 방어 → 적극적 공세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부록-1〉 도전과 대응 : 대량살상무기의 전략적 패러다임 변화

	냉전시대	냉전 이후 시대	9.11 이후
도 전 요 소			
적대세력	전통적 국가	불량 국가	테러조직망, 불량국가
능력	핵무기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핵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주 요 대 응			
확산 방지	비확산 조약 및 체제	협력적 위협감축	차단, 선제공격, 협력적 위협감축
사용 방지	억제	봉쇄	선제공격
억제/약화	민방위	소극적 방어(미군), 전구미사일방어	미사일 방어, 소극적 방어(국토), 사후 관리

출처 : Charles D. Lutes, "Combating WMD Threats," in Stephen Flanagan and Jim Schear, eds., *Strategic Challenges: America's Global Security Agenda* (Washington, DC: NDU Press, 2008), p. 63.

- 그 후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의 CTR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바,
 -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거명하였고, 국가전략보고서(NSS, 2002), *Th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2003)에서도 이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다루었음.
 - 또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연계 가능성을 감안, 구소련 이외의 지역으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처하는 구상들(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등)을 제안하였음.
- 2002년 6월에는 캐나다 캐너나스키스(Kananaskis)에서 G-8 정상회담이 거행되어 Global Partnership(GP)이라는 차원에서 CTR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 골자는 2012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그중 미국이 매년 10억 달러씩 100억 달러 담당, 나머지는 G-8국가들과 기타 20여 개 국가들이 담당)로 확대하는 것임.
 - 그 후 2004년 6월 한국도 정식으로 GP에 참가하였음.
 - GP의 확대로 이라크, 리비아, 알바니아 등도 대상국이 되었으며, 북한에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아야 함.

- 특히 비국가 행위자인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유엔안보리는 모든 국가들이 비국가 행위자가 화생방(NBC) 무기, 관련 물질 및 운반수단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결의안 제1540호(UNSCR 1540)를 채택(2004.4)하였으며,
 - 최근에는 오바마 정권인수팀에서도 *Securing the Bomb 2008*(2008.11.18)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테러리스트 조직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핵테러리즘의 “현실적 위협”을 감축하는 것을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하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¹⁰

■ CTR 프로그램 평가

- CTR이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운반수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감축하고자 대상국과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안보 프로그램의 총칭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해체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 미 의회에서 통과된 Soviet Nuclear Threat Reduction Act of 1991(일명 Nunn-Lugar 법, 1992 회계년도 국방예산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상원에서 86대8로 통과, 1991.11.28)로 시작하였으나, 소련의 붕괴에 따라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1992)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음.
 - 그 후 Nunn-Lugar Expansion Act of 2003에 따라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처음의 사례가 알바니아, 2004)에 대한 CTR 적용근거도 마련하였음.
- 초기에는 구소련의 붕괴와 해체, 내전 가능성 우려, 구소련 핵무기의 처리 문제(핵확산, 통제 상실, 핵미사일의 오발 사고로 인한 핵전쟁 발발 등)가 미국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고, 미국의 안보를 위하여 CTR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성립되었음. 즉 소련의 해체에 대한 긴급 대응의 일환으

¹⁰- Matthew Bunn, “Securing the Bomb 2008,” a report by Havard University’s project on Managing the Atom(November 2008); Matthew Bunn and Andrew Newman,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An Agenda for the Next President,” a transition paper by Havard University’s project on Managing the Atom(November 2008) 참조.



로 등장한 것이 CTR이었음.

- 당시 CTR의 4대 목표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4대 목표란 ①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인프라의 해체, ②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 및 물질의 통합 및 안전 확보, ③ 투명성 제고 및 높은 행동수준 권고, ④ 확산방지를 위한 방산 및 군사 협력 지원을 의미하고,
 -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생물무기위협감축 프로그램(BTRP), 화학무기제거 프로그램(CWEP), 핵무기저장안전 프로그램(NWSS), 전략공세무기제거 프로그램(SOAE), 대량살상무기 및 확산방지 구상(WMD-PPI)이 있음.
- CTR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초기에는 약 6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후 증액하여 100억 달러대에 도달하였고, 1998년 중반까지 미 국방부는 24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Nunn-Lugar가 수정안이 통과되었을 당시에는 1992 회계년도 국방부 예산의 일부인 4억 달러를 전용하는 것을 의회가 승인하는 형태를 취하였음.
 - 1992회계년도-1998회계년도에는 매년 3억-4억 달러, 1999회계년도-2002회계년도에는 매년 4억 3백만-4억 7천 5백만 달러¹¹
 - 그러나 초기에는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사업의 초점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의회 내에서 많은 논의가 벌어졌고, 그 결과로 의회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음.
- 1994년 2월 클린턴 행정부 당시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는 국방부 장관, 애쉬턴 카터(Ashton Carter)는 국방부 차관보로 취임하였으며, 닌-루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음.
 - 페리는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후에는 대북특사가 되어 방북 후 ‘페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페리 프로세스’가 추진되었음.
- 미 국방부는 CTR에 있어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 핵물질, 인력안보(핵기술자의 재교육/전업) 등 4개 주요분야에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
 - 실제로 미 국방부의 자금 배분을 살펴보면, ① 파괴 및 해체(destruction and dismantlement), ② 일련의 안전/안보/통제(chain of custody),

¹¹- Amy F. Wolf,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updated March 6, 2002).

③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④ 기타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 유사한 개념으로 협력적 비확산(Cooperative Nonproliferation, CNP) 구상이 있음. CTR은 주로 미 국방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CNP는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2004년 이후 국제위협감축구상(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 GTRI)도 전개하고 있음.
 - 에너지부(DOE)가 주관하는 구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고 위험성 핵 및 방사능 물질과 장비를 제거하거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사명임.
 - 근년에 들어와서도 의회(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상원 외교위원회)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소들(CSIS, 카네기국제평화 기금, 스티븐연구소, 스탠리재단 등)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나. 협력적 위협감축의 적용 사례

■ CTR 프로그램의 대상 국가별 사례

- 소련 해체 직전의 전략핵무기는 다음의 <표 부록-2>에서 보는 바와 같았음.

<표 부록-2> 소련 붕괴 직전 러시아 이외의 전략핵무기 현황(1991년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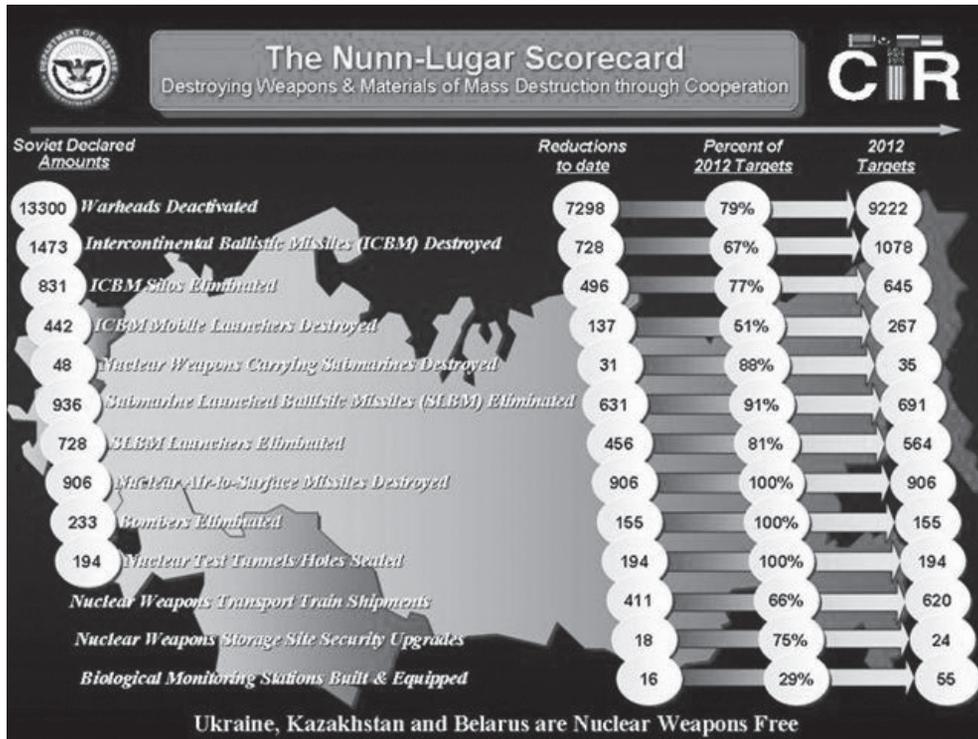
국가	체계	수량	탄두수
우크라이나	SS-24	46	460
	SS-19	130	780
	Bear H	21	168
	Blackjack	13	156
카자흐스탄	SS-18	104	1040
	Bear H	40	380
벨로루시	SS-25	54	54



○ CTR 전반에 대한 미국내 평가

- NTI(Nuclear Threat Initiative)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보고서는 지난 15년간의 성공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특히 NTI 위원장인 샘 님(Sam Nunn)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 상원의원은 CTR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¹²
- 루가 상원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년-루가 점수표(Nunn-Lugar Scoreboard)’라는 것을 게재하여 ICBM, SLBM, ASM 분야 등에서 최신화된 진전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음.¹³

〈그림 부록-〉 년-루가 점수표



¹²- Carnegie Moscow Center, “Celebrating 15 Years of the Nunn-Lugar Program” (August 2007); Amy F. Wolf, “Nonproliferation and Threat Reduction Assistance: U.S. Programs in the Former Soviet Union,” *CRS Report for Congress*(updated January 3, 2008).

¹³- <<http://lugar.senate.gov/nunnlugar/index.cfm>>에서 참조.

-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3대 핵무기 보유국), 카자흐스탄(4대 핵무기 보유국), 벨로루시(8대 핵무기 보유국)의 완전한 비핵화에 성공하였음.
 - 2008년 12월 현재 ICBM 2000기 이상 해체, 미사일 발사대 1000기 제거, 핵탄두 7,300개 정도 비활성화 달성
 - 1999년까지는 4,800개 이상의 핵무기 폐기
 -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및 국외반출 방지
 - 핵무기 과학자 5만여 명의 재교육 실시 등
- 우크라이나 사례
 - 구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130기의 SS-19, 46기의 SS-24에 탑재할 수 있는 1240개의 핵탄두, 564대의 전략폭격기, 약 3,000개 정도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음.
 - 러시아와의 역사적 관계 때문에 초기에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국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미국의 중재로 국가안보 보장과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찬성으로 전환하였음.¹⁴
 - CTR과 우크라이나 비핵화의 교훈은 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핵무기 전부를 폐기당한 국가는 억제력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불모가 되어 불안이 발생한다는 점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의 경제지원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고, 향후 북한사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음.¹⁵
- 카자흐스탄 사례
 - 군사원조 제공¹⁶
 - 년-루가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사파이어 프로젝트(Project Sapphire)는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무기급 고농축우라늄 600kg(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하였던 위력의 원자폭탄 6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을 우스크-카메노고르스크(Usk-Kamenogorsk)에서 미공군

¹⁴- Christoph Bluth, *The Collapse of Soviet Military Power*(Aldershot, UK: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5).

¹⁵-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Preventive Defense: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merica*(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9) p. 67, p. 76, p. 79, p. 139; Doug Bandow, "Ukrainian Missile Defenseless," *National Interest online*(September 2, 2008) 참조.

¹⁶-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Preventive Defense: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merica*(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9), pp. 68-69.



C-5수송기에 실어 미국 델라웨어의 도버 공군기지로 반출한 후 테네시 주의 오크 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저장함으로써 CIA의 우려처럼 이란의 첩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알바니아 사례

- 알바니아 정부는 새로이 발견된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 알바니아 국방부는 난-루가 프로그램에 따라 화학무기비축분의 폐기를 공표하였음(2007.7.19).

○ 리비아 사례

- 카다피와의 담판에서 핵폐기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리비아에 경제지원 및 안보보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¹⁷
- 핵물질은 미군용 수송기 편으로 반출하여 저장하였고,
- 국교정상화와 함께 각종 제재를 해제하였고 경제 지원을 제공하였음.

2. CTR 프로그램의 대북 적용 : 잠재성과 고려요소

가. 대북 적용의 잠재성

■ 대북 적용과 관련한 선행 연구

- 그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는 CTR 프로그램의 대북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와 연구, 현지 방문이 진행되어 왔음.
 - 2004년부터 진행되어온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소개하자면, ① CSIS의 Bob Einhorn, Joel S. Wit, Jon Wolfsthal 등, ② 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의 Rose Gottemoeller, Jon Wolfsthal, Sharon Squassoni, Martha Olcott 등, ③ 동북아시아대위원회(문정인, 엄종식), 통일부(양창석, 오충석), 통일연구원(전성훈, 박종철, 박영호), 외교안보연구원(이동휘, 전봉근, 최강), 국방연구원(김창수, 백승주), 세종연구소(백학순, 이상현), 국방대

¹⁷- Iran-Lybia Sanctions Act 참조.

학교(한용섭, 김용호) 등이 있음.

-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Joel S. Wit, Jon Wolfsthal, Choong-suk Oh,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CSIS, December 2005)가 있음.
- 한국의 경우, 2007년 말에는 통일부 국장들과 실무자, 원자력연구원의 핵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CTR 관련 연구소와 시설을 방문한바 있음.
- 2008년 2월에는 스탠포드대학교 FSI의 헤커 박사(Siegfried S. Hecker, 전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소장)가 이끄는 방북단(2008.2.12-16)에 위트(Joel S. Wit) CSIS 객원연구원(전 국무부 직원으로 체네바 협상에 참여, 금창리조사단장 역임, 현재는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위원), 루가 상원의원의 보좌관인 루스(W. Keith Luse)도 합류하여 넌-루가 프로그램의 대북 적용가능성을 조사하였음.
 - Wit에 의하면 북한의 핵과학자들은 북한의 핵시설이 해체, 폐기된 후 자신들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직업으로 전직(redirection)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관심도 있다고 함.
-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누지(Frank Jannuzi, 전 조 바이든 상원의원 보좌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시절의 (외교보좌관)한국팀장)도 CTR의 대북 적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며, 따라서 향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한 정책 수립시 대북 CTR 제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미국 에너지부는 의회에 북핵 폐기 예산으로 3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음. 자누지는 “북핵 폐기가 협상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변 주변의 방사능 청소, 핵 폐기물 처리, 플루토늄 운반 등 핵 폐기 사업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음.¹⁸

¹⁸ 『조선일보』, 2008년 10월 17일, A16면.



나. 대북 적용시 고려요소

■ 주요 고려 요소

- 긍정적 요소로는 기존정책과의 유사성, 참여국의 이점, 6자회담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메카니즘과의 연계성, 축적된 외교적·기술적 경험, 대북군비통제정책에서 점하는 위치와 중요성, 북한 급변사태시를 대비한 대북 적용의 필요성 등이 있음.
- 부정적 요소로는 북한의 체제유지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집착, 북핵 6자회담의 진전 미흡, 러시아 및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견제, 미 의회와 한국 국회 내의 우려와 부정적 시각, 국내여론의 보수화 경향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한 예산 확보의 문제, 관료주의로 인한 집행상 지연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 지역 및 전세계 차원의 비확산 체제 및 군비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넌-루가 CTR, GTRI, PSI,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북한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핵연료 제공, 핵폐기물 관리, 안보, 안전 등)이 검토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제2차 핵태세검토(NPR)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CTR의 대북 적용에 주는 긍정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¹⁹⁾
-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수립에서 관계개선과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실시,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통제 및 감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CTR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 기타 관련 사항

- NPT체제와의 관계 : 과거에는 준수의 위기(crisis of compliance)에 있다가 근년에 들어와서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부정행위자(cheaters)의 증가 탓에 신

¹⁹⁾ National Defense Strategy(June 2008)의 관련 부분 참조.

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가 발생, 그리고 신기술의 확산을 더욱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NPT체제의 무력화와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CTR 프로그램들을 많은 대상 국가들에게 적용하려 할 것임.

- 부시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 NPR) 보고서와 오바마 행정부의 수정 여부 및 폭이 주는 함의
 - Bluth 교수의 진단 : NPR의 new triad(전략핵, 재래식 공세적 타격체계, 적극적/소극적 방어)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²⁰
 - Jeffrey G. Lewis 박사(Director, Nuclear Strategy and Nonproliferation Initiative, New American Foundation)가 예상(2008.8.27 국방연구원에서 행한 강연)하는 수정 방향으로는, ① 핵무기 임무의 조정(핵탄도수를 1,700개 이하로), ② 러시아와 새로운 협정 체결, ③ 경고수준의 하향 조정(예 :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제거)
 - 스탠리 재단의 분석에 의하면 부시의 새로운 NPR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특히 재래식 타격능력, 적극적 및 소극적 방어, 인프라에 대한 회의)가 많이 제기되어 왔던 이상, 새로운 미 행정부 하에서는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음.²¹
- MD 참여 및 PSI의 정식가입과의 연계 문제는,
 - MD 건설과 CTR-NK 추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CTR-NK의 추진과 PSI 공식 가입을 연계하는 것의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비핵화와 NPT 재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비확산의 틀(정치적, 법적, 규제적)의 변화 전망도 참고하여야 함.²²
- 미국의 핵확산 방지 및 대확산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과 파키스탄 A. Q. Kahn(칸) 네트워크와의 관계도 여전히 참고 사항이 될 것임.
 - 북한은 2000년경 원심분리기(P-1, P-2형)를 파키스탄으로부터 획득하고,

²⁰- Christoph Bluth, "Toward Nuclear Superiority? U.S. Strategic Nuclear Pow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0, No. 2 (June 2008), pp. 125-140.

²¹- Matthew Martin, "US Nuclear Weapons, Force Posture, and Infrastructure," *Policy Dialogue Brief*(The Stanley Foundation, January 25, 2008) 참조.

²²- Stanley Foundation, NCNK, CACDA, IFPA가 공동으로 실시한 6자회담과 관련한 국제 회의(베이징, 2008.10.24).



원심분리기 모형과 설계도를 받아 원심분리기를 조립하고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음.

- 50kg 정도의 UF6(uranium hexafluoride, 육불화우라늄)와 주입 및 회수에 이용되는 장비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됨.
- 칸 연구소와 북한의 핵물리학자/물리학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역으로 이용할 가치 있음. 북한은 이미 특정한 수준의 장비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향후 CTR 적용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칸 연구소 출신 과학자들과 면담도 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제약점

- 구소련 공화국의 사례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제약점이 예상됨.
 -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물질 및 핵무기의 유출 및 확산에 의한 위협은 구소련 공화국들의 위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으므로 CTR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미·러관계의 변화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근의 그루지야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러관계는 북핵문제 해결, 간접적으로는 CTR의 대북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 북핵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전반적인 미·러관계가 악화한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CTR(CTR-NK)을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더욱 많은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CTR-NK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임.
 - 한미 전략적 동맹의 강화에 따라 자칫하면 한·러관계가 다소 소원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CTR-NK를 추진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지장에 있을 개연성이 있음. 즉,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의 밀착화가 진전될수록 북핵 6자회담에서 핵폐기와 관련된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CTR-NK의 당위성, 구체적 내용과 추진 시점, 예산 등에 관한 찬반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약점도 내포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CTR-NK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루가 상원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참여 국가들의 “관료주의적 문제” 일 수 있고, 국가간의 역할분담과 비용 분담상의 이견도 있을 것임.

다. CTR 프로그램의 대북 활용방안

■ 우선순위의 설정과 한미동맹의 강화

-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의 우선순위
 - 우리의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의 핵동결, 폐기를 통한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 국방정책에서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더하여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 대안들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 한미 전략적 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차원과 남북협력 차원에서 CTR 프로그램의 대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소위 “loose nukes”의 확산 방지(실 패한 국가들과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에 국가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런 우선순위는 지켜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에너지부는 2009년 예산으로 3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협력적 비확산(CNP) 구상과의 연계 가능성도 타진하였음.
 - 미국 일부에서는 북한이 CTR-NK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미 수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국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물질의 반출을 억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가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음.

■ 검토 가능한 활용방안

- KEDO 경험을 활용하고, 중국도 CTR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³

- KEDO는 앞으로도 다자체제의 구축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다자협회의 실패를 가져온 조직, 예산, 정책상의 도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교훈도 제공하였음.
- 구체적으로 KEDO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① 외교적 합의를 이행하는 기술적 조직의 임무는 고위수준의 정치적 지도력의 지원을 받아야 지속적인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 ② 조직의 독립성 부여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 ③ 기술적 문제는 종종 정치문제가 되어 불신을 조장하고 이행을 지연하게 한다는 점, ④ 합의사항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조직상 얼마나 어려운 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²⁴

○ CSIS 보고서²⁵가 제시한 방안의 골자는,

- CTR-NK 프로그램의 시행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 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가능할 것임. 또한 이미 2002년 제2차 핵위기 이전에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음.
- 5가지 연관된 목표 : ① 대북협상의 의제로 활용, ② 불확실성 감소 및 투명성 증대, ③ 시설과 과학자를 비군사적 용도로 전환, ④ 북한의 고립 방지, 국제사회 편입 지원, ⑤ 북한 경제의 현대화 유도
- 국교정상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위협감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일했던 과거의 다양한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함.
- 다자적 접근방식을 택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정치적, 재정적 책임분담을 통한 약속이행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음. 특히 6자회담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단기

²³- Robert Carlin, "Notes from KEDO's Experience," (The Stanley Foundation, November 2007); Bradley O. Babson, "Futur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 Exploration of Issues and Options," *The Stanley Foundation's Conference Report* (June 2005); R. Michael Schiffer, "What Did We Learn From KEDO?," *Policy Dialogue Brief* (The Stanley Foundation, November 2007) 참조.

²⁴- The Stanley Foundation, *Policy dialogue brief* (November 2006) 참조.

²⁵- Joel S. Wit, Jon Wolfsthal, Choong-suk Oh,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A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December 2005).

- 적 우선순위는 협력적 비핵화 과정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임.
 -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5년 이상의 시간과 최소한 2-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리고 일련의 합의와 수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임.
 - CTR 프로그램들은 주요 해체 임무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음.
 - CTR 프로그램들은 과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던 중요한 자원을 민간경제의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 CTR은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다른 무기 프로그램을 줄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CTR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함. 즉 미국의 지도력 행사, 다자체제 능력의 구축, 비정부기구의 동원, 한국내 정치적 지지 확보, 이행감독을 위한 ‘협력적위협감축국’ 설립 등이 필요함.
-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따르는 시점에서 경수로를 제공하고,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CTR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²⁶
 - 또한 CTR-NK를 북핵 불능화 제2단계에서 본격적 거론하고 제3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이와는 달리 제3단계를 지난 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²⁷
 - CTR 기술을 북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물리적 통제 강화, 해명도(accountability) 증대, 기술의 민간분야 이전 및 누출 방지, 핵무기/물질/장비의 수출 금지, 운반수단 제거, 방산업체의 전환 지원, 대체에너지 제공,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필요한 핵무기/핵물질/장비 제거 등이 있을 것임.

²⁶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2008년 2월 1일자 발언.

²⁷ Whang, Joohe and George T. Baldwin, "Dismantlement and Radioactive Waster Management of DPRK Nuclear Facilities,"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Cooperative Monitoring Center Occasional Paper(April 2005) 참조.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인도의 정보기관 및 과학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절한 시점에 이르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 남북협력 추진방안

가. 준비사항

■ 대외적 준비사항

- 구소련 공화국에 대한 CTR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 적용할 때는 쉬울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CSIS(2005) 보고서²⁸는 상황 전개에 따라 훨씬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지만 향후 10년간 10억 달러 이하의 예산으로 CTR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바 있음.
 - 단기적 우선순위는 협력적 비핵화 과정에 북한의 핵 관련 프로그램들을 편입하는 것임.
 - CTR 프로그램들의 대북 적용에 들어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현실적으로 감안 하되, 대북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도전과 합의 후 소요될 최소 5년 이상의 세월과 2억 내지 5억 달러의 비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여야 함.
- 미국 오바마 행정부(NSC,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와 상원 외교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대북 CTR 적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북한 급변사태시, 핵무기 및 핵물질에 대한 통제 상실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기 전에 CTR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함.

■ 대내적 준비사항

- CTR-NK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를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대

²⁸- Joel S. Wit, Jon Wolfsthal, Choong-suk Oh,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nd North Korea*,

북 외교 수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CTR-NK를 방치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국회와 여론의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북한의 핵보유와 위협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last best chance)”를 놓쳐서는 안 됨.²⁹

○ 북핵 폐기 과정에 대비하여 한국 과학자, 기술자들을 해외 파견과 훈련 참가를 통해 양성함으로써 미국 및 러시아의 기술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예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 이 전문가들이 방북하여 현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북한의 핵위협 이외에도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미사일의 위협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하며, 필요한 화학자, 생물학자, 의학적 대책을 위한 전문 의료진을 확충하여야 함.

○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개발 백서와 지도(White Paper and Map on the DPRK’s Nuclear Weapons Development)’를 완성할 필요가 있음.³⁰

○ 북한의 산업인력(인적 자원)의 확충과 연계하여 과학자/기술자의 전직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제조 중심의 개성공단을 확장하여 이곳에 기술자들을 흡수, 수용하는 방안과 주요 도시에 별도의 연구소를 건립하여 인적자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

○ 대북협력사업의 하나로 북한의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마음 얻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함. 그동안 탈북자(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참작하여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함.

- 상정 가능한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유엔사의 개념계획

²⁹- Susan E. Rice, “We Need to Talk to North Korea,” *Washington Post* (June 3, 2005).

³⁰- 전성훈, 『북핵 ‘2·13 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1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77.



(CONPLAN) 5029를 작전계획(OPLAN)으로 구체화하는 경우 이 대안을 반영하고, 한국 정부의 계획에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나. 남북협력 추진방안

■ 비전과 로드맵

- 비전을 남북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안보전략의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는 CTR-NK를 적절한 시점에서 추진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을 유도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지원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에 이바지한다”라는 비전을 선언하여야 함.
 -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관심 사항이고, 실제로 기술 및 재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국가들의 국익이 반영될 것이고,
 - 단순히 남북한 간의 협력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치는 함의가 매우 클 것임.
 - 향후 우리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대북한 전략 및 정책 수립시 CTR-NK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CTR-NK의 비전과 로드맵을 준비하여 북핵의 불능화, 폐기, 비핵화 단계별로 북측에 제시하고 남북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 CTR의 경험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념연구 실시.
 - 중국, 일본은 운용연구 및 이행단계에 합류시키는 방안 고려.
 -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독자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북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범정부 차원에서 CTR-NK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미국의 국방위협감축처(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 DTRA)와 유사한 조직의 신설을 고려하고,

- 모든 관련 부서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창설을 검토하되,
- 일단은 국방부 군비통제관실의 초기 역할(남북군사회담, 남북한 군사통합 과정에서 CTR-NK의 역할 등)을 존중하고,
-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에게도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여야 함.

○ CTR-NK의 로드맵(안)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임.

〈표 부록-3〉 CTR-NK 로드맵(안)

	제1단계(2009-2010)	제2단계(2011-2012)	제3단계(2013-2017)
대외적 준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제안 검토 •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적 비핵화 과정에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반영 • 오바마 행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 • 기타 주변국가들과의 사전 교감 • 6자회담의제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북일관계 개선, 국교정상화 지원 • 중국과 일본의 CTR-NK 합류 유도 • 유엔 및 G-8의 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가들의 기술 및 예산상 협력 획득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출범 • CTR-NK 본격적 추진 지원
대내적 준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 및 국방정책에 반영 • 국회 및 여론의 지지 분위기 조성 • 공동개념연구 실시 • 북핵개발백서와 지도 발행 • 작전계획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항 법제화 • 국방예산에 반영 • 국내 핵 및 화생 분야 전문가 양성 • 북한 과학자·기술자 전직 및 교육기회 제공 • 북한 주민의 마음 사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법제화 • 한반도 군비통제와의 연계 본격적 추진 • 남북교류협력 차원의 지원 확대 • 북한 과학자·기술자 전직 및 교육기회 확대
파괴,해체 등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무기 불능화 •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 확대 • 북핵 물질의 반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물질 제거 • 화생무기의 비군사화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파괴 및 해체 • 화생무기의 비군사화 지속
남북협력 추진 양상 과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주의적 지원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기술적 지원 확대



- 이미 지구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체제로 자리 잡혀가는 CTR 프로그램의 기초로 하되 남북한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남북간에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 및 다수의 이행협정(imple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야 함.
- 북한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단계적인 CNP를 실시하고,
 - 과학자들이 민간연구분야로 전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함.

4. 결론 및 정책건의

가. 결론

- 미국에서 시작한 CTR은 원래 소련의 해체에 대한 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등장하였지만, 대상국가가 확대되어 왔으며 북한에 대한 적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물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CTR을 북한에 적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축(CTR-NK)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 6자회담의 진전이 미흡한 가운데 향후 북한에 대한 CTR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국 이외의 주변국가들에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CTR-NK의 추진 과정에서 대외적, 대내적 준비사항을 철저히 하여야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제약점 또한 많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작하여야 함.

나. 정책건의

- CTR-NK의 비전과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즉 한미 전략적 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CTR-NK가 추진되어야 함.
- CTR-NK의 비전과 로드맵을 준비하여 북핵의 불능화, 폐기, 비핵화 단계별로 북측에 제시하고 남북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 초기에는 기존의 국방부내 조직을 활용하되, 점차 범정부 차원에서 CTR-NK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區域合作的新關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윤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중무 외 공저	8,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1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2 (2008)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헌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Studies Series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